

# 大田廣域市議會本會議會議錄

第 168 回

第 2 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2007年 7月 25日 (水) 午前 10時

## 議事日程

第168回 大田廣域市議會(第1次 定例会) 第2次 本會議

1. 시정질문의 건
  - 가. 김태훈 의원
  - 나. 권형례 의원
  - 다. 김재경 의원
  - 라. 이정희 의원
2. 운영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

## 附議된 案件

- |                                      |     |
|--------------------------------------|-----|
| 1. 시정질문의 건.....                      | 2면  |
| 가. 김태훈 의원(일괄질문).....                 | 2면  |
| 나. 권형례 의원(일괄질문).....                 | 8면  |
| 다. 김재경 의원(일문일답).....                 | 14면 |
| 라. 이정희 의원(일괄질문).....                 | 30면 |
| ·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 대전광역시교육감)..... | 35면 |
| · 보충질문(김태훈, 권형례).....                | 60면 |
| ·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           | 65면 |
| 2. 운영위원회 위원(박수범) 보임의 건.....          | 75면 |

(10시 02분 개의)

○議長 金榮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 1. 시정질문의 건

○議長 金榮寬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실시되는 시정질문은 평소 의원님들께서 집행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를 지적하고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등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의원의 질문은 곧 150만 시민의 질문이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명확하게 책임있는 답변으로 시정 및 교육행정을 소상하고 투명하게 밝혀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정례회에 질문하실 의원은 네 분으로 오전에 세 분 의원의 일괄질문과 한 분 의원의 일문일답이 있는 뒤 오후에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과 보충질문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정질문 순서는 김태훈 의원님, 권형례 의원님, 김재경 의원님, 이정희 의원님 순으로 진행을 하고 질문 방식은 김태훈 의원님, 권형례 의원님, 이정희 의원님 세 분은 일괄질문과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김재경 의원님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2의 규정에 의하여 본질문은 20분 그리고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서는 질문시간을 지키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은 관례상 발언시간이 20분이 되면 타임벨이 두 번 울리고 이후 3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차단되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에 임하시는 박성호 시장님과 김신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의원님들의 질문에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시어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태훈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

#### 가. 김태훈 의원(일괄질문)

(10시 05분)

○議長 金榮寬 김태훈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議員 중구 제3선거구 김태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대전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계시는 박성호 시장님, 김신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그동안 고민해 왔던 사안들을 시장님을 비롯한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민선 4기 1년은 대전시민의 복지환경 및 생활여건에 있어서 많은 진전과 발전이 있었던 반면,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많은 난제들이 산적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이는 대전의 행복한 미래 건설과 모두가 잘사는 대전 건설을 위해서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모두가 풀어나가야 할 공동의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 대안들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부문입니다.

첫째, 투기과열지구 해제입니다.

2007년 5월 현재 전국 평균 실업률이 3.2%에 이르는 가운데 대전의 실업자 수는 2만 8,000명으로 실업률은 3.9%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률은 57.9%로 전국 평균 60.7%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지표들은 대전시의 열악한 지역경제 실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하겠습  
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들어 대전의 발전과 미래를 좌우할 자기부상열차 실용화 노선 시범사업,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각종 현안사업들이 줄줄이 탈락과 무산이라는 고배를 마시고 있습니다.

특히 급변 투기과열지구 해제 대상지에서 대전이 제외됨으로써 지역건설 경기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의 회복을 희망했던 대전시민 모두의 열망이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시장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대전의 주택시장은 이미 붕괴 직전에 있습니다.

지난 2003년 6월 대전시 전체가 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지정되면서 지난해 초부터 주택 거래량이 큰 폭으로 줄었고, 청약률이 감소하는가 하면 지난 1년간 주택 미분양률은 4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대전시는 향후 4년간 서남부 1단계지구, 노은 3지구 등에 주택 5만 4,000호를 공급할 예정에 있는 등 정부가 걱정하는 투기과열지구와는 거리가 먼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건설교통부의 투기과열지구 해제 지역에서 대전시가 제외된 것은 대전시의 정치력 부재로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앙정부의 결정은 지역 주택시장 입장에서 볼 때 사망선고나 다름없으며, 그로 인해 주택시장 부실화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아울러 대전 지역경제의 침체가 더욱 고착화되어 갈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시민들은 “우리지역 국회의원들은 어디에 있으며, 대전시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나?” 하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전지역의 건설경기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대전시의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해 어떤 생각과 대안을 갖고 계신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적극적인 기업 및 투자유치 활동입니다.

대전시의 산업구조가 취약한 상황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기업유치 및 투자유치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대전시의 기업 및 투자유치 실적은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충청남도는 이완구 지사가 취임한 이후 해외투자유치 건수로 46건, 금액으로는 11억 6,700만 달러의 외자를 유치해 전국 지자체들 중에서 서울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투자유치 실적을 나타내었습니다.

또한 충청북도는 국내 단일 규모로는 최대 규모인 8조 7,065억 원의 하이닉스 반도체공장 증설을 청주시로 유치하는 등 국내기업 25개 업체에 11조 678억 원, 외국기업 3개 업체에 1억 5,000만 달러의 유치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대전시의 기업 및 투자유치 실적은 지난해 15개의 외부기업과 5,490만 달러의 투자유치에 그쳐 타지역에 비해 그 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민선 4기 시작 무렵 시장께서는 투자통상본부를 신설하는 등 직제와 기구를 개편하여 기업 및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대전시가 유치한 기업 및 투자유치 실적은 대부분 양해각서에 그치는 등 그 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언제부터인가 대전시는 산업용지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외부기업 및 투자유치의 저조한 실적을 무마하려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부족한 산업용지 탓만 할 것입니까?

이에 본 의원은 시장께 묻고 싶습니다.

시장께서는 취임 후 1년 동안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으며 또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어떤 비전과 목표, 전략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형 국책사업의 유치입니다.

시장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은 2008년부터 2037년까지 약 5조 6,000억 원이 투자되는 대형사업으로써 약 82조원의 생산증가 효과와 38만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예상되는 대형사업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와 같은 대형 국책사업들이 우리 대전지역에 유치된다면 다양한 유무형의 파급효과로 인해 궁극적으로는 대전의 고용창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대전시는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대형 국책사업들을 우리 대전지역으로 적극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형 국책사업 유치를 위해 대전시민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범시민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아가야 하며, 이를 중앙정부에 전달함으로써 우리 대전시민의 적극적인 유치의지를 대외적으로 피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역 국회의원과 출향 인사 등 정치적 역량을 지닌 인사들과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지역의 정치적 역량을 키워 나가고 다가올 대선에 첨단의료복합단지 등의 대형 국책사업 대전 유치가 대선 후보자의 공약사항에 적극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대형 국책사업 유치를 위해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 시장께서는 어떻게 추진하실 생각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중구 공동화 해소 문제입니다.

대전시의 지역간 불균형 문제는 둔산 신도심을 중심으로 한 서구와 유성구 그리고 원도심을 중심으로 한 중구, 동구, 대덕구 간의 불균형 문제로 표현됩니다.

그중 중구 지역은 대전에서도 제일 낙후되어 가고 있는 자치구로서 대전시로부터 정책적 소외감마저 느끼며, 나아가 지역 간 갈등의 발생소지가 가장 높은 지역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중구 원도심은 지난 '90년대 이후부터 심각한 공동화 현상을 겪어오고 있습니다.

그간 중구 공동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들이 대전시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지만 그에 대한 성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다 보니 중구 원도심 공동화 해결의지는 점차 대전시 정책에서 뒷전으로 밀려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유성구는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한 첨단과학도시와 관광특구로 발전해 나가고 있으며, 서구는 서남부권 개발을 비롯해 대전의 행정, 금융, 문화, 주거의 중심지로서 지속적인 발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구지역은 매년 1만 명 이상의 인구가 유출되어 심각한 인구감소 현상을 겪었던 지역이지만 최근에 가오지구 개발, 무지개 프로젝트,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등으로 인해 인구가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덕구는 1, 2, 3, 4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산업기능 활성화와 계족산, 대청댐 등의 풍부한 천혜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새로운 발전을 모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대덕구 소외론을 통해 대전시 개발정책의 최대 수혜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중구는 충남도청 및 유관기관들의 이전에 따른 원도심 일대의 상권 위축이 예상되고 있으며, 보문산 주변 일대의 고도제한에 따른 개발의 어려움이 예상

되는 등 다른 자치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동화가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전시 미래의 도시발전을 계획하고 있는 2020년 대전도시기본계획에서 중구지역의 보문생활권은 중심상업, 위락·문화, 물류·유통의 중심지 기능과 특성화 전략으로 한발의 상업, 문화의 심장부 역할을 담당하도록 기능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능들이 중구지역에 제대로 갖추어질지 의문입니다.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상권 위축과 보문산 일대의 고도제한 그리고 은행선화동의 공동화가 점차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보문생활권이 어떻게 상업의 중심지와 위락·문화의 중심지가 될 수 있으며, 물류·유통의 중심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현재 중구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 역시 그 실효성이 의문시됩니다.

작년부터 보문산 일대에 플라워랜드가 조성되고 있지만 지역 전문가들로부터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근 대전동물원의 경우 매년 입장객수가 줄어들고 운영실적 역시 매년 30억 원 이상의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뿌리공원은 그 자체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지속적으로 사람을 끌어들이 교육, 문화, 관광자원으로서의 매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물리적인 시설투자와 개발로 중구지역의 공동화를 해결하고자 하는 대전시의 정책은 그 실효성과 효과에 대해 의문마저 들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 의원은 중구의 공동화 현상을 해결하고 새로운 활력을 찾기 위해 중구 원도심 지역과 보문산 일대의 플라워랜드, 동물원, 뿌리공원을 관광개발 축으로 하는 관광개발특구 지정을 제안합니다.

대전시는 특구지정을 통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지역으로 적극 이끌어내는 한편 그 시너지 효과를 원도심 지역으로 확산함으로써 중구 전역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중구의 안영동 일대는 2003년부터 경륜장 후보지로 지정되어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을 제한하다가 경륜장 사업이 무산되어 버린 상태입니다.

이러한 대전시의 무책임한 정책 약속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은 극심한 좌절감과 허탈감에 빠져 있으며, 이 지역에는 원망과 원성만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안영동 지역 주민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한 상황인데, 이에 대해 시장께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성구 송강의 농업기술센터 이전과 관련해 작년에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전 대상지들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한 결과, 중구 목달동 구 산성동사무소 자리가 최적지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의 반대로 인해 이전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구지역 주민들은 당초 결정된 사항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대전

시의 행정력에 불신감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대전시의 행정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은 당초의 결정대로 중구 목달동으로 농업기술센터를 이전할 것을 적극 바라고 있는데, 이에 대해 시장께서 갖고 계신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2012년 말 충남도청 신도시 건설이 완료되어 충남도청이 이전하게 되면 충남경찰청과 충남교육청 등 170여 개 기관이 함께 이전하게 되어 있어 중구 원도심 공동화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에 대해 대전시의 대책마련은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대전시는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중구 공동화 문제 해결을 위해 지금부터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나서야 할 때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 시장께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육재정 지원 부분입니다.

다가올 21세기 대전의 미래 발전은 우수한 인력의 육성과 확보에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전의 미래를 책임질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하지만 미래의 역군을 육성하고 담당해야 할 대전시교육청의 예산은 너무나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시장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2007년도 대전시교육청 예산은 약 1조 200억 원으로 이 가운데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71%나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산 가운데 지방채 상환경비, 예비비, 기본운영비 등의 경직성 경비가 약 14.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년 교육청 예산 가운데 인건비와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순수 교육사업 경비는 약 14.76%에 그치고 있어 원활한 교육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사업예산이 너무나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업비 비율은 전국 7대 광역시 중 최하위 수준으로 우리 대전시와 도시 규모가 비슷한 광주 18.3%, 울산 18.23%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크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타시·도의 교육예산 역시 우리 대전시와 비슷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교육사업에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을 볼 때, 본 의원은 우리지역 교육사업에 대한 대전시의 무관심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시장님!

대전의 미래를 위해 나무심기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자원이 부족한 국가에서 특히 과학과 교육도시를 표방하는 대전시에서 미래를 위해 우수한 인재양성을 하는 것이 나무심기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중앙정부의 교육재정지원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지역의 인재양성을 위해 대전시 차원에서의 보다 적극적인 교육투자와 정책적 배려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열악한 교육재정을 교육청에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대전의 미래 교육대계를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대전시의 적극적인 교육투자와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들과 시장께서 갖고 계신 대전시 교육대계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이 자리를 통해 제안한 내용들이 지역의 발전, 더 나아가 대전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되기를 기대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김태훈 의원 시정질문서

.....  
○議長 金榮寬 김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나. 권형례 의원(일괄질문)

(10시 27분)

○議長 金榮寬 다음은 권형례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권형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議員 국민중심당 비례대표 교육사회위원회 권형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계신 박성호 시장님과 김신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금번 시정질문을 통해 날로 치열해져 가는 자치단체 간 경쟁 속에서 우리 대전시가 보다 경쟁력 있는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건강한 가정과 사회가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기본 인식 하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출산과 관련한 대전시의 정책 방안입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2005년 1.08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고 대전시 역시 출산율이 1.1명으로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발표는 다시 한 번 우리 사회에 심각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적절한 인구 정책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출산 문제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소홀히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전세계 최저 출산율 기록한 프랑스의 경우 최근 극적으로 출산율이 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양육비를 적극적으로 보조해 주었고 일하는 여성들에게도 육아 휴직 및 육아 시설을 제공하여 2000년 출산율을 1.89명으로 선진국 중에서 상당히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미 저출산 현상을 극복한 경험을 가진 유럽 국가들의 국내 타시·도 출산 관련 정책을 예를 들어 대전시의 정책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타시·도의 경우 저출산 대책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전시의 경우 복지지원 담당부서에서 저출산 고령화 업무를 1명이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2007년 대전시의 추진시책을 살펴보면 출산율 상승의 경제적 지원 없이 형식적인 지원에만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정서발달에 가장 중요한 출산 후 1년의 시간을 법적으로 보장해 주고 있는 육아휴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을 할 수 없는 풍토와 부서원들의 눈치로 인해 감히 엄두도 못 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전시청의 경우 육아휴직 실시현황을 살펴보면 여성 공무원 486명 중에서 2003년도에 1명, 2004년도에 2명, 2005년도에 없었습니다.

2006년 5명에 불과한 실정이었습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장께서는 저출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계십니까?

심각성을 인식하신다면 왜 저출산 담당부서가 없으며 효과적인 정책방향 모색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과거 정책을 스스로 분석하신다면 몇 점이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호주사람들에게 왜 출산율이 증가하느냐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4,000 호주달러의 베이비보너스 때문이라고 서슴없이 대답합니다.

또한 타시·도의 경우 출산장려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왜 지원책이 없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장님은 아이를 양육하는 여성들에게 아동양육비를 지원할 필요성을 느끼고 계십니까?

대전시청의 여성공무원에 대한 육아휴직을 솔선수범적으로 확대해 나갈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빈곤아동을 위한 대책입니다.

한국사회에서의 빈곤아동은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회마저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빈곤의 대물림 현상이 악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저출산 사회에서는 아동 개개인의 사회적 가치가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나 빈곤가정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에 공헌하고 개인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마저 갖지 못한다면 이는 사회·경제적으로 큰 손실이라 생각합니다.

2007년 보건복지부는 전국 16개 시·군·구에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공평한 양육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 및 0~12세 아동을 대상으로 보건·복지·교육의 맞춤형 통합서비스인 희망스타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1년에 3억 원씩 전액국비로 3년간 지원하고 공무원 3인 이상 희망스타트 전담팀을 구성하여 임산부 및 빈곤아동에게 프로그램상 보건복지교육을 통합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전시 빈곤아동은 12세 이하 아동 24만 6,490명 중 1만 4,372명으로 5.8%나 됩니다.

우리 대전의 아이들 1만 4,372명이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대전시가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3에 의해서 수립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살펴봅시다.

빈곤층의 아동들에게 빈곤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해피스타트 운동을 수행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단지 빈곤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 및 통합지원 서비스가 여기저기 분산되어 시행되고 있을 뿐입니다.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민선4기 시정 역점 사업인 무지개 프로젝트는 영구임대아파트의 저소득층에게 희망의 씨앗을 주는 것이 목적이라 하였습니다.

그런 목적을 가졌다면 어째서 빈곤아동과 그 가족에게 보건·복지·교육을 통합한 맞춤형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희망스타트 시범사업에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전액국비 지원인데도 왜 마다했습니까?

지금이라도 빈곤아동에 대한 전담팀을 구성하여 0~12세 빈곤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내 서비스 개발과 통합서비스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시 장사정책에 관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대전시는 교통·국방·행정의 중심도시로 국립현충원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훌륭한 지리적 입지조건으로 인해 우리 시 공설화장장은 관내뿐만 아니라 관외지역 이용자도 아주 많은 편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 화장장은 타지역에 비해 시설이 낙후되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요청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지난 제152회 정례회 당시 존경하는 김재경 의원님과 제162회 행정사무감사 당시 본 의원 또한 이 사안에 대해 개선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후 대전의 명확한 정책 입안과 추진이 없었습니다.

이는 집행기관의 근무태만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다시 한 번 대전시의 장사정책과 최근 확정된 공설 화장장 현대화 사업에 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표6〉에 나타난 것처럼 공설묘지는 만장에 이르렀고 공설화장장은 개장 후 30년이나 지나 규모나 편의시설 면에서 매우 열악해 질 높은 장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표7〉에 나타난 것처럼 주요 6대 도시에 화장장 시설 및 화장물 현황을 보면 대전시는 타지역에 비해 화장물이 저조할 뿐더러 화장로 추가증설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

또한 타시·도는 최근 5년간 시 외곽에 최신식 장사종합단지를 적극적으로 조성하였습니다.

타시·도는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전시의 경우 장사종합단지 조성을 위해 발주했던 2004년 용역의 결과는 무시된 채 현 계획대로 사업이 급선회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일부 주민의 넘비적 집단행동을 두려워한 대전시는 능동적인 대응을 하지 못해 행정의 신뢰성이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따라서 이같은 행정이 반복된다면 현재 추진 중인 사업 또한 서남부권 개발과 차기 지방선거 일정에 따라 다시 난관에 부딪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관한 시장의 명확한 사업추진 의지와 방향에 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시의 주요 혐오시설로 분류되는 시설의 입지선정에 있어서는 도시의 50년, 100년 대계를 전망하고 도시의 장기발전 전략 차원에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2004년 장사단지 입지평가에서 현 정림동 입지는 생태계보전, 시공성, 인구분포 등에서 타입지에 비해 현저히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따라서 현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시 여러 문제점들에 직면함은 물론 직·간접적인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뒤따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즉, 도시미관의 훼손, 도시공간 활용의 제약, 월평공원의 환경파괴 문제, 신·구 민원 발생, 기존시설 내 공사로 인한 시설의 어려움과 사업비 증가 등이 예상됩니다.

특히, 현 위치에 장사종합단지가 조성될 시에는 정림동 일대에 극심한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장사종합단지가 아닌 화장장 시설로만 조성될 시에는 화장장과 납골당이 이원화

됨으로써 시민들의 불편이 초래되고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비효율성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문제점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설화장장 이용자 현황을 분석해 보면 충남도민의 이용률이 매년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올해 개정된 「장사법」 제5조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이완구 충남도지사와 상호발전적 장사시설 수급계획과 예산보조 등에 관해 정책협의를 나설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구봉산 숲 복원에 관한 것으로 대전시 8경인 구봉산은 현재 공설 제1, 2남골당이 위치해 있고 약 50m<sup>2</sup>에 달하는 공설묘지가 산재해 있어 흉물스럽기 그지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장사법」에 의해 15년씩 3회 연장을 해주는 제도를 잘 활용하여 지금부터 연장보다는 방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납골 또는 수목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기존의 묘지를 재정비해 구봉산 숲을 복원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학교폭력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급속한 가족 해체와 사회적 무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희망인 아이들이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때로는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 복합적으로 발생하나 무엇보다 입시위주의 성적 지상주의와 학교폭력 문제에 보다 적극 대처하지 못하는 교육환경에서 기인된다고 봅니다.

교육청 나름대로 학교폭력 근절에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폭력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전시의 학교폭력 현황을 보면 폭력가해 학생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발생건수와 폭력피해 학생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의 저연령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폭력건수의 증가는 그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2007년 3월 30일자 중도일보, 충청투데이 신문에 집단폭행, 보복폭행, ‘조폭뺨 치는 학교폭력’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면 대전에 남녀 중학생 16명이 무더기로 검거된 내용 등으로 학교폭력이 날로 조직화되고 잔인해지며 반인륜적인 양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대전의 학교와 경찰은 학교폭력근절대책협의회, 어머니경찰대를 운영하고 학교폭력 취약지역

에 대해 집중적인 순찰을 하고 있으며 학교폭력 취약시간대에 112 순찰차를 배치하는 등 예방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책만으로 과연 학교폭력이 근절될 것인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교육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학진학만을 위한 입시위주의 치열한 경쟁은 대다수의 학생에게 다른 선택을 배제하고 오로지 입시에만 매달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로부터 발생하는 인성교육의 부재는 인격이 올바르게 성장되지 못하기 때문에 학교폭력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현장에서 인성교육을 강화시키고 학교폭력에 대한 사전예방과 사후 관리에 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관한 특별한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대부분 학교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꺼려 음성적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학교폭력이 근절되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이 발생할 시 적절히 대처한 교사나 학교측에 대해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셋째, 학교폭력 문제해결 과정에서 외부의 전문인력이나 전문기관의 협력을 통한 학교폭력근절 프로그램이 개발·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의 모니터링을 위해 교육청이 주도하여 학교·경찰·학부모 등이 함께 하는 학교폭력 신고·상담 네트워크를 구축하실 용의나 추진방안이 있으신지 교육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해 방청하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도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줄 것을 기대하며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권형례 의원 시정질문서  
.....

○議長 金榮寬 권형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議長 金榮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

#### 다. 김재경 의원(일문일답)

○議長 金榮寬 김재경 의원님 일문일답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議員 서구 제1선거구 출신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입니다.

시내버스준공영제에 관한 사항은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조사특위를 구성할 만큼 시민들의 관심이 지대한 사안인지라 시간관계상 서론부분은 생략하고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본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대전시가 생긴 이래 사상 유래 없는 시내버스가 장기간 파업했습니다.

이 파업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大田廣域市長 朴城孝 김재경 의원님께서 시내버스와 관련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원인이야 어떻게 됐든 장기간에 걸친 시내버스 파업으로 인해서 시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린 점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의회와 더불어 시, 각종 언론, 많은 봉사단체들이 파업의 어려움을 함께 겪어내기 위해서 참여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를 또한 드립니다.

아울러서 이를 계기로 김재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준공영제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확산됐고 이를 계기로 확실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파업하게 된 주원인은 아마 버스기사분들이 10%가 넘는 인건비 인상을 요구하면서 6월 22일까지 해결되지 아니하면 파업하겠다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런 차제에 저희는 누차 설명드린 대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준공영제가 도입 당시부터 다소 성급하게 도입돼서 사전준비가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특별히, 작년 5월인가요 그 무렵에 한 협의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양의 내용들을 합리성 있게 제공된 것이 아니라 버스업계의 요구대로 다 들어주었다는 데 비용증가의 원인이 있다고 인식했습니다.

따라서 버스업계에서 주장하는 10%가 넘는 인건비 인상은 도저히 합리적이 아니고 들어줄 수 없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이유가 돼서 파업이 시작됐습니다.

○金載京 議員 작년 5월이 아니고 2005년도 5월입니다.

그리고 파업의 원인이 그것이 전부라고 하면 시장께서는 준공영제 파업의 근본적인 원인을 전혀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에 들어가게 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하고 검토한 바에 의하면 첫째, 시에서 임금협정에 불성실했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운송수익금을 100% 시에서 관리하고 시에서 지급하는 표준운송원가대로 회사를 운영하는 상태에서 노사 양측만의 임금협정은 전혀 무의미합니다.

운송원가 산정기준에 보면, 시내버스준공영제 운영지침 제7장제27조를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시내버스준공영제 운영 및 세부지침입니다.

여기에 보면 “시장은 당해 연도 말 이전에” 제27조입니다, “시내버스업체와 협의 절차를 거쳐 시내버스발전위원회 최종조정을 통해 확정한다.”고 나와 있고, 제12장 제62조에 보면 단체협상에 관한 부분인데 “시내버스 노사간 단체협상, 다시 말해 임금협상 또는 단체협약은 준공영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시장이 제시한 권고의 견을 고려하여 성실히 교섭 합의하여야 한다.” 제12장제62조에 따라 2007년도 표준운송원가는 이미 2006년 말까지 확정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7년 4월에 와서 사업조합과 사전협의도 없이, 물론 본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습니다만 감사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표준운송원가책정안을 제시하여 무산하게 함은 대전시의 성의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전기사 인건비가 전체원가의 54%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바 먼저 운전기사의 임금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제12장제62조에 시장이 제시한 권고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상의 폭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 임금협정의 인상률의 권한은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내버스사업조합은 실질적인 재정권이 없고 형식적인 협정에 임하므로 노동조합 측에 불성실하게 보였고 노동조합의 감정을 사게 된 것입니다.

노동조합의 주장 역시 2006년 12월부터 2007년 4월까지 노사간 임금협정이 대여섯 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광역시에서는 단 한 사람도,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던 것이 불만이고 집행기관의 무성의에 불만을 토로했던 것입니다.

자, 임금협정에 불성실했다는 본 의원의 설명에 시장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大田廣域市長 朴城孝 아마 노동조합 측의 주장이 대부분 그러리라고 인식됩니다.

시에서 예산을 대주고 준공영제와 관련해서 적자 부분을 보전해주는 구조 하에서 준공영제 자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파업의 원인은 직접적인 원인을 말씀드린 것이고, 준공영제의 원인, 문제점부터 개선은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불성실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노사간의 합의가 원만히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통보 온 것이 10.4%인가요, 그 인상을 요구한 통보가 왔습니다.

그 이후에 협의가 되기 시작한 것으로 기억하고 사실 그 전에 준공영제에 대한

개혁의지를 시장으로 당선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표명했고 금년 들어서 지속적으로 그것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당사자들이 다 와서 논의하는 과정도 있었습니다.

그런 차제에 거기에서 준공영제에 대한 개선여부가 노사 양쪽에 불이익하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와 더불어 행동을 예견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것은 제가 버스파업기간중에 기종점지를 다 돌아봤는데 거기에서 느낀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이라는 것을 느꼈고 6월 1일자로 노조에서 두 번째 공고문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보면서 ‘이미 오래 전부터 이것을 기도하고 움직였구나’ 하는 생각을 해본 것이고 임금과 관련된 직접적인 협상을 할 때 저희 간부나 정무부시장도 충분히 가서 참여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요구사항 10.4%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시에서는 물가인상을 고려해서 2.5% 내지 3%선을 고수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추진한 일이지 협상을 통해서 민간기업의 협상마냥 일정한 가상치를 놓고 그것을 조정해가는 이런 형태의 협상자세는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의 입장에서 그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시민의 예산을 쓰는 입장에서 합리적인 선을 정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설득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가상치는 별도로 설정해놓고 실질내용은 다르게 갖고 있다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성의껏 협상에 임했다고 보는데, 당일 파업기간중에도 지속적으로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노조측에서는 그렇게 이유를 잡습니다만 저희가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金載京 議員 본 의원은 파업기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파업이 발생한 원인을 말씀드리는데는 것입니다.

○大田廣域市長 朴城孝 그런데 그 전에도 충분히 준공영제와 관련된 논의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金載京 議員 됐습니다, 보세요.

준공영제의 관리감독기관이고 재정권을 갖고 있는 시가 임금협정장소에 2006년 12월부터 2007년 4월까지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은 불성실을 극렬하게 대변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파업의 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운전기사의 급여가 얼마인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大田廣域市長 朴城孝 그전에도 뉴스에서 나왔습니다만 시에서는 운전기사를 하나 씌으로써 들어가는 비용을 319만원인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이나 인건비나 이런 표현의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런 차제에 그것은 정리되는 표현의 방식이 다른 것이고 시민의 입장에서는 버스 기사를 한 명 쓰는데 319만원을 지출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가 이야기한 것이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퇴직 관련 된 충당금이라든지 4대 보험이라든지 이런 등등은 아니지 않느냐는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와 관련된 그 부분에 대한 상세내역표도 이미 제출된 바 있습니다.

○金載京 議員 319만 9,710원입니다, 그렇지요?

○大田廣域市長 朴城孝 예, 그렇게 기억합니다.

○金載京 議員 1급 22일 만근기준으로 봤을 때 운전직 월급여가 227만 519원이고요, 24일 만근을 했을 때 251만 7,910원입니다, 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319만 9,710원은 표에 있듯이 1인당 월 소요경비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을 마치 기사들의 월급여라고 언론에 보도함으로 인해서 기사들에게 반감을 샀던 것입니다, 그렇지요?

○大田廣域市長 朴城孝 글썄요, 그것은 인건비나 임금이나 보수나 이런 부분,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출하는 비용이…….

○金載京 議員 파업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인데, 분명히 월급여는 251만 7,910원입니다.

그런데 소요경비와 급여가 같다고 보십니까?

자, 본 의원이 갖고 있는 보도자료를 보니까 이것이 우리 대전광역시에서 시민들한테 배포한 기자회견문입니다.

시간상 다 빼고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논란은 기사인건비를 주는 입장과 월임금을 받는 입장의 차이로 발생한 오해로 우리 시가 월평균 320만원, 7년 근속자 24일 근속 시 정규기사 월보수로 버스 업체에 매월 지급하면 버스업체에서 노사간 합의한 임금협상내용과 4대 보험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운전기사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운전기사 월보수액은 32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월보수액과 월소요경비는 내용 자체도 그렇고 언어 자체도 다른데 이런 식으로 대전시민에게 보도하니까 기사들이 반감을 살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大田廣域市長 朴城孝 그것은 파업의 원인이 아니고 파업중에 논란이 됐던 사항이지 파업의 원인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金載京 議員 아니지요, 3일 안에 파업이 끝났을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大田廣域市長 朴城孝 무리한 임금인상을 요구한 것을 시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전제가 그 주장을 저희가 접수하지 않은 것이지, 그 외 인건비든지 보수든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논란은 파업 이후에 발생한 논란거리였고, 그것은 파업의 원인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미 준공영제 자체가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도된 것처럼 2006년도에도 250~260억 원이 준공영제로 인한 비용으로 나갔습니다.

금년에는 한 300억 원 정도로 예정된다는 것이 추정치입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작년도 인건비를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려준 것으로 기억하는데 거기에 더 한 번 십점 몇 퍼센트의 인건비를 올려달라고 요구하면 시민을 대변하는 시의 입장에서 어떻게 그것을 들어줄 수 있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희가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사안입니다.

그 과정에서 인건비나 월보수나 이런 논란의 거리가 있는데 지금 참모의 조언에 의하면 월보수는 임금 플러스 인건비를 총칭한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많다 적다, 임금이냐 아니냐는 부분보다 비슷한 광주시와 비교할 때 적어도 25만원 이상은 더 지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비용이.

그런 상황 하에서 어떻게 십점 몇 퍼센트를 더 올려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선에서 합리적인 비용이 지출되어야 하는 것이고 단지 준공영제는 기사의 인건비만을 개혁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개혁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구조, 감독구조, 임원에 대한 보장된 이윤구조 이런 것이 적정한 것인지 훨씬 다른 부분에 논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논리의 흐름이 인건비나 아니냐는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준공영제를 개선할 때는, 물론 김재경 의원님께서도 버스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고 계셨고 특별히 원가산정소위원회 위원원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소상하게 알고 계십니다.

이제는 개념의 논란보다도 방향성을 잘 잡는 것이 오히려 시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金載京 議員 방향과 정책적 대안은 본 의원이 결론 부분에 할 것입니다.

지금 광주에 비해서 25만원 더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광주가 연초비를 줍니까?

시장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大田廣域市長 朴城孝 연초비 내용은 제가 추후에 파악해서.

○金載京 議員 아니, 안 주고 있습니다.

○大田廣域市長 朴城孝 그건 이랬다고 합니다.

○金載京 議員 시간이 없어서 본 의원이 이 부분까지는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운전자보험 역시, 교통국장 답변해 주십시오.

○議長 金榮寬 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교통국장 차준일입니다.

○金載京 議員 이 원인과 근본을 모르고서 개선할 수 없습니다.

준공영제 문제 대전시민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처음부터 뜯어고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두 부분을 다 끝내고 마지막 부분만 가지고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것입니까?

물겠습니다.

운전기사 월급여 251만 7,910원 중에 복리후생비가 있고 회사부담 4대 보험이 있지요?

○交通局長 車濬一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議員 복리후생비 내역 얘기해 보세요.

○交通局長 車濬一 복리후생비는 저희가 일괄적으로 회사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金載京 議員 내역이 뭐뭐냐고요.

복리후생비 내역에 24일 만근 해서 20만원 있는데 뭐뭐냐고요, 내역이?

○交通局長 車濬一 식비라든가.

○金載京 議員 정확하게 하세요, 식비는 맞아요.

○交通局長 車濬一 식비, 장갑, 피복비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金載京 議員 중요한 것을 뺐어요, 지금 운전자보험 들어있잖아요.

○交通局長 車濬一 물론 운전자보험 들어 있습니다.

○金載京 議員 운전자보험 얼마씩 줍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운전자보험이 4만 6,000원 정도 됩니다.

○金載京 議員 1인당 2만 1,310원이지요?

그렇지요?

○交通局長 車濬一 예.

○金載京 議員 이것이 연간 얼마입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연간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金載京 議員 시장께서 광주에 비해서 25만원 많다는 얘기를 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제가 의원님 우선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金載京 議員 우선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추가질문할 때.

○交通局長 車濬一 모든 운전자의 총보수는 양자간의 협상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와 우리 시와 비교해서 전체적인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金載京 議員 우리 시가 운전자보험까지는 안 들어줘도 됐잖아요, 준공영제 도입당시에.

그 당시는 국장이 아니었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交通局長 車濬一 그런 부분 앞으로 개혁하려고 합니다.

○金載京 議員 연초비도 안 주어도 됐고요, 그렇지요?

전국 5대 도시 중에 우리 대전시만 준 것 아닙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議員 타도시도 처음에는 10%에서 11%를 주장했더라고요,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번 임금인상협상에서도.

그러나 우리 대전시는 누누이 얘기하지만 지난 2006년 12월부터 올 4월까지 한번도 협상자리에 안 나타난 것이 잘못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노동위원회의 중재안도 거부했고요.

준공영제 당시를 본 의원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준공영제를 도입하는 당시의 정책적 실패원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중에서.

계약직 140명 정규직으로 전환시켰지요?

○交通局長 車濬一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議員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그것은 적절한 조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金載京 議員 아니지요, 분명히.

거기에 예산이 많이 반영됐지요?

○交通局長 車濬一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議員 이번 2007년도 임금협상에서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노동조합과 진정한 합의를 추구했다면 분명히 노동조합도 양보할 몇 건의 예산절감이 있었다고 봅니다, 분명히 본 의원한테 토로했고요.

그런 점들이 아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금인상 역시 자기들만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파업의 근본적인 원인은 임금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계속 임금 가지고 답변하시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大田廣域市長 朴城孝 그런데 저희가 요구를 받기에는 임금인상을 얼마를 요구했던 부분이지요.

○金載京 議員 시장께서는 보고를 잘못 받으셨지요.

○大田廣域市長 朴城孝 그러면 내용을, 못한 것들도 그분들이 정식으로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金載京 議員 국장께서는 들어가세요.

운전기사 입장에서 볼 때 기본급 기준이 2005년도, 2006년도 대표가 나와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전체 대표이사, 관리직 인건비, 정규직 인건비 총괄했을 때 자기들 임금이 전혀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주장을 우리가 무조건 무시하거나 반영을 안 시키면 우리 정책이 잘못된 것이지요.

시간상 넘어가고 둘째,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준공영제 문제점에 대해서 파고 들어가겠습니다.

사전준비 없이 성급하게 준공영제를 도입함으로써 연간 257억 원이 넘는 재정지원을 하면서도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서비스 개선은 이루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책임의 전체를 전임책임자에게 미루고 있다는 뉘앙스도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맞습니까?

○大田廣域市長 朴城孝 전임책임자가 누구지요?

○金載京 議員 전임시장입니다.

○大田廣域市長 朴城孝 글쎄요, 보는 분에 따라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 달리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준공영제는 2005년 7월에 도입했습니다.

서울시에서 도입한 것을 벤치마킹해서 도입했는데 그 당시에 아마 경험이 없고 하기 때문에 우선 파업의 고리를 끊겠다는 성급함 때문에 준비작업 없이 도입했습니다.

그런 이후에 작년 선거 전에 이미 협상을 하면서 상당한 부분을 버스업계에 유리한 쪽으로 들어준 것이 비용구조를 다시 확대시켰지요.

그래서 저희가 느낀 것은 선거 이후에 와서 준공영제에 대한 분명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 하에서 업무를 지시했고 금년에도 수 차례에 걸친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던 차에 파업이 발생해서 업무가 잠시 중단됐는데 이미 많은 부분이 시민들께 알려졌고 의원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또 모든 내용들을 주민들에게 다 알려드리면서 준공영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金載京 議員 본 의원도 생방송에서도 토론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준공영제가 사실 건설교통부 지침사항 아니었습니까?

무리하게 정책을 도입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일찍 도입한 것이 아쉽다, 6개월 뒤에만 도입했어도, 이미 3개 회사는 도산위기에 처해있고 지금도 D회사는 기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일찍 서둘러 도입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잘못된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이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으로, 방금 교통국장께 질문드렸지만 거기에 따른 재정부담이 36억 원입니다.

시행과정에서 중형버스 150대, 계약직 300명입니다, 70대, 계약직 140명을 한 순간 정규직으로 전환시켰어요.

이런 것은 잘못된 거지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 금액이 36억 원이면 전체 기사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36억 원 안 줘도 되는 돈을 그런 식으로 추가해서 일단 36억 원 예산 낭비했습니다.

시간상 자세하게 하기는 그렇고 또 무료환승제로 인한 재정부담은 117억 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민에게 주는 혜택이에요.

이런 식으로 언론보도를 해야지요.

그리고 연료비 인상으로 인한 재정부담이 약 23억 원입니다.

이것이 준공영제 전보다 23억 원이 연료비가 추가됐고 그래서 총 257억 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드리면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약 36억 원, 117억 원, 23억 원 해서 총 176억 원, 총 257억 원 중에 변동금액은 176억 원입니다.

그러면 준공영제 전에 국고보조금이 얼마지요?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십시오.

국고보조금, 유류비.

○大田廣域市長 朴城孝 40억 원.

○金載京 議員 이게 40억 원입니까, 60억 원입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大田廣域市長 朴城孝 40억 원으로 기억합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준공영제 이전에 국고지원금은 45억 원입니다.

○金載京 議員 2006년도는 얼마입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2006년도도 재정지원금은 유류비를 제외하고 25억 원 정도 됩니다.

○金載京 議員 그러면 45억 원 플러스 25억 원이면 얼마예요?

○交通局長 車濬一 70억 원 정도…….

○金載京 議員 맞지요?

60억 원이라고 합시다 그냥.

시장께서는 이 금액에 대한 정확한 숙지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시장께서는 지금 60억 원은 따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

○大田廣域市長 朴城孝 유류지원금은 지원되는 것이 준공영제와 상관없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추가 20 몇 억 원은 국가에서.

○金載京 議員 그러면 320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까, 총?

지금도 320억 원인줄 알고 있어요?

준공영제를 시행하면서 총 들어가는 예산이 국고지원금 60억 원 플러스 257억 원 해서 320억 원입니까?

○大田廣域市長 朴城孝 257억 원은 2006년도에 준공영제로 들어간 비용으로 알고 있고 그 안에 국가지원금 20억 원 포함되어 있고 유류대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車瀋一 유류대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金載京 議員 유류대 제외해서 총괄해서 257억 원 안에는 유류대 20억 원 제외되어 있지요?

○交通局長 車瀋一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議員 그러면 시내버스재정지원금 총괄 들어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총 지원금이?

○交通局長 車瀋一 시에서 재정지원하는 것은 전체 작년도의 경우에는 257억 원입니다.

○金載京 議員 국고 포함해서요?

○交通局長 車瀋一 예, 국고 일부 포함입니다.

○金載京 議員 일부입니까?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交通局長 車瀋一 유류비를 제외한 나머지입니다.

○金載京 議員 유류비 25억 원을 뺀 나머지요?

○交通局長 車瀋一 예.

○金載京 議員 정확합니까?

본 의원과는 개념이 약간 다른데.

그러면 언론보도를 이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내버스 환승으로 인해서 117억 원은 시민들에게 환원한 것이다, 돌려준 것이다.

○交通局長 車瀋一 의원님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무료환승으로 117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나 운송원가를 전체운송수입을 우리 시가 일단 수입으로 잡아서 그 중에서 운송원가로 지출된 것을 계산한 나머지 차액 재정손실분을 시가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의적 의미로 보면 무료환승비용을 우리 시가 같이 부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만 떼서 별도로 이것은 아니라는 논리로 얘기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金載京 議員 언론에 이런 식으로 배포했을 때는 전체금액 엄청난 액수 257억 원 막대한 돈을 투입한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니까 시민들도 정확하게 알 권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에게 환원한 117억 원은 시민들에게 주어진 혜택인데 이런 것은 정확하게 보도하셔야지요.

○交通局長 車瀋一 물론 그것을 구체적으로, 분야별로 나누어서 보도할 필요가 있다고 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金載京 議員 그런데 시민들은 이런 것은 모르고 무조건 257억 원 다 써서 파업

을 10일간 한다 이런 식으로 호도하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전체 우리 시의 재정으로 지원하는 부분을 257억 원을 놓고 저희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의원님 지적해주시는 대로 그 내역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무료환승비가 얼마이고 순수한 운송원가가 얼마나 이렇게 구분해서 할 필요가 있는지는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金載京 議員**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검토해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3개 회사에 임원이 42명이었습니다, 42명이었는데 준공영제 실시와 동시에 각각 동시에 2명씩 총 26명을 구조조정했고 각 사 적정금액 8,000만원 총 10억 4,000만원으로 책정한 것은 효율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06년 적정금액과 대수별로 이중지급구조 방식을 선택하면서 적정초과금액이 1억 8,000만원이 되었어요.

이것을 수당명분으로 지급하면서 또 과다지출현상이 있기에 시정을 하라고 수 차례 본 의원이 대전버스발전위원회에서 했고 소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하나도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007년 표준운송원가 개선방안에 따르면 표준인원제와 적정금액제를 폐지하고 대수비율제를 적용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제도가 채택되면 다음과 같은 불합리한 점이 도출됩니다, 표에 나와 있습니다.

이 제도는 바로 원가보전의 원칙에 예외된다고 사료됩니다.

본 의원은 2006년도 이중지급방식을 폐지하고 13개 회사가 균등지급이 원가절감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시도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교통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임원 인건비와 관련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어떤 산정기준에 의해서 13개 사의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일률적인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정규모 이하의 회사에 대해서는 적정한 수준으로 다시 기준이 없이 인상을 해서 지급했다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적정하지 않다고 보고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금년도에 개혁대상으로 개혁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말씀해 주신 전체 회사에 대한 고정비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가 되지만 그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당초에 2005년도 도입 당시에는 효율성 상위 70% 이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도에 원가협상 하는 과정에서 전체 업체의 평균으로 함으로써 상당한 재정 추가소요가 더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이나 또는 원칙을 정한 것을 가지고 앞으로는 적용이 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개혁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金載京 議員** 원가보전의 원칙을 위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예.

○金載京 議員 그러면 이것도 계속 우리 국장께 묻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시장께서는 잘 분석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으니까, 관리직 원가산정입니다.

2억 2,000만원 추가 잘못 나간 것 거두어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회수해야 되지요?

○交通局長 車濬一 제가 파악하기는 일부는 환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載京 議員 일부 이전 몇 백 만원 했었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되지요.

그것은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 부분만 회수한 것이고 이것은 한영회계법인, 우리 시에서 용역 준 데가 한영회계법인 맞지요?

○交通局長 車濬一 예.

○金載京 議員 거기 감사결과를 본 의원이 다 자료를 도출해 냈습니다.

결국 13개 회사 임금대장별 이 자료에 다 있습니다.

이 자료에 13개 회사 임금대장을 다 분석한 결과가 2000년도 하반기부터 회사에 우리 시에서 주장하는 보유대수, 대당 보유대수를 하다보니까 관리직 표준의원제를 하다보니까 8명이 추가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 돈이 2억 2,000만원인데 실제로는 사주들은 활용을 안 했거든요.

이것을 알고 계십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그런 부분, 회계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왜 나머지를 환수하지 못했느냐 하는 부분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밀하게 감사를 해서 잘못 지급되었거나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金載京 議員 매월 이를 시에서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지요?

○交通局長 車濬一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議員 안 했지요?

○交通局長 車濬一 그동안 작년도하고 조금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金載京 議員 1년 6개월 동안 안 했지요?

○交通局長 車濬一 작년도에 2회에 걸쳐서 지도 감독을 했습니다.

저 자신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한 2회 정도 지도 점검을 했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을 위해서 금년도 하반기에 이미 채용절차를 밟고 있습니다만 회계사 전문직을 채용해서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그리고 전문적인 감사를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金載京 議員 회계사를 빨리 모집하시고.

○交通局長 車濬一 지금 채용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金載京 議員 채용하셔서 하반기부터는 철저한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交通局長 車瀋一 예.

○金載京 議員 지금 우리가 시에서 추진하는 적정금액가, 대당원가, 이중지급 형태를 채택하면 2006년보다 7개 회사에만 1억 5,000만원이 더 추가돼요, 예산이.

이것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시에서는 원가를 절감하겠다는, 구조개선을 주장한다 이렇게 하면서 관리직 표준원가산정 이런 이중지급 형태를 채택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 꼭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交通局長 車瀋一 예.

○金載京 議員 별첨 8에 나와 있는데요, 시간상.

2006년 12월말까지 각 사에서 추가로 채용한 인원은 4명밖에 안 됩니다.

월평균 120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인원을 파악하지 않아서 여기에 한 2억 8,000만원은 정비원이 없는 데도 돈이 나갔어요.

이것도 시정조치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 128명분이 나갔는데 실제 고용인원을 임금대장을 보니까 120명밖에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이 돈 어떻게 거두어들여야 되겠지요?

○交通局長 車瀋一 예, 지금 의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그런 것을 개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金載京 議員 아니, 개혁은 당연히 하지만 잘못 나간 돈은 회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交通局長 車瀋一 물론 그렇게, 앞으로 감사를 통해서 정확한 진상조사가 된 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건비라든지, 인건비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 임원이라든지 관리직이라든지 기타직 인건비 여러 가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구조와 현원을 정확히 파악해서 관리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 중의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金載京 議員 감독소홀 부분은 분명히 운영지침 제7장 제33조1항, 2항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숙지하시고, 원가구조 개선을 위해서 연료비를 제외한 모든 원가지급기준을 대당원가방식으로 전환한다는 의도로 2007년도 운송원가의 개혁방안을 당사자인 버스조합과는 사전협의도 없이 시내버스발전위원회에 제시함으로써 최종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원인입니다.

○交通局長 車瀋一 의원님,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 운송원가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金載京 議員 아니, 이렇게 지금까지 다 문제점을 도출했는데 또 뭘 여기에서 항

변한다는 것입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과거 2006년도까지는 알겠습니다만 금년도 운송원가만은 사전에 저희가 사주들과 충분한 협의를 했고 또 의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운송원가소위원회도 금년에 별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 소위원회에서 적정한 심의를 하는 과정에 파업이 발생된 것이고 그렇습니다만 그런 과정은 앞으로 투명하게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金載京 議員** 그러면 우리 시에서 원가절감방법이 있습니까?

한 번 얘기해 보십시오.

○**交通局長 車濬一** 물론, 원가를 상당 부분 절감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金載京 議員** 아니, 방법이 있습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몇 가지 방법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분야별로 있습니다.

○**金載京 議員** 발표를 해주세요, 우리 시장께서 해주세요.

○**大田廣域市長 朴城孝** 김재경 의원께서 소위원회 활동을 하시면서 아주 세세한 것까지 다 파악을 하시고 지적을 하신 점에 대해서 우선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준공영제 앞으로 나갈 길은 개선입니다.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불합리한 부분을 고치는 것이 남은 과제입니다.

그런 시도를 시에서 이미 시작을 했고 많은 전문가들도 참여를 하고 또 의원님들도 좋은 얘기를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적된 방향은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고요, 기본적인 원칙은 준공영제 경쟁원리가 도입되지 않았다는 점 또 비용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감할 수 있거나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더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소홀했다는 점 그래서 관리를 제대로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그것도 외부라든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하는 철저한 관리 감독 시스템을 더 보강해야 되겠다는 점이고 앞으로는 최소한 적은 비용으로 시민의 효율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이 방향의 목적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세 안건에 대해서는 아마 충분한 논의가 거쳐질 것이고 이런 방안들을 마련해서 9월까지는 안을 만들어서 의회에도 설명을 드리고 또 시민들께도 다 보고를 드리면서 가장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그 와중에 특히 우리 김재경 의원님께서서는 운송원가소위원회를 맡고 계시니까 더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일을 해 가는 과정에서 많은 조언을 해주실 것을 계제에 당부드리고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金載京 議員** 국장께서는 들어가십시오.

본 의원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소견은 준공영제를 시행하면서 고비용은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인이 지금 수익성과 관계없이 지정된 노선을 운행하는 의무제로 있습니다, 우리 시가.

그러니까 수익성, 어떤 노선은 돈을 많이 벌어들이고 어떤 노선은 돈을 적게 벌어들이는 이런 것에 관계없이 가야됩니다, 의무제로.

또 하나 운전기사 역시 대당 1일 2.4명을 채택함으로 인해서 고임금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아까 서두에 본 의원이 빨리 개선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도입과정에서 이런 것이 준비가 안 되었던 것입니다.

또 국가의 유류정책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바꿀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고유가에 대해서는 항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총원가 중에 운전기사 임금이 54%, 연료비가 23%입니다, 총 77%에 해당하는 원가절감 방법을 우리가 연구하는 이외에는 다른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임금 같은 것 어떻게 우리가 임의적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임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서두에 얘기를 했듯이 계약직을 활용해 달라 본 의원은 이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무리하게 우리가 70명을 도입하는 바람에 36억 원이라는 예산이 낭비되었어요.

이것은 노·사와정이 합의를 하면 될 것 같더라고, 본 의원이 보니까.

사와 노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노·사·정 셋이서 나서서 우리가 계약직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버스 한 대당 소요인원이 계약직 1일이 2명입니다, 정규직은 2.44명입니다.

그러니까 0.44가 더 많지요 그리고 버스 한 대당 소요경비가 계약직이 연간 3,600만원, 정규직 8,700만원입니다.

한 대당 연간 절감액이 얼마냐면 5,100만원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지하철 1호선이 개통된 이후에 비수익노선을, 본 의원도 이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는데 22대나 증차를 했습니다.

이것이 하루 20만원 적자가 됩니다.

지하철 1호선 개통이 되었으면 중복노선을 우리가 굳이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시에서는 연료비 절감을 위해서, 본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의 BNS시스템을 적용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 대전시의 버스를 보니까 정확성이, 연비를 산정하는 것은 있습니다만 계절별 다르죠 또 평일과 공휴일이 다르고 방학기간이 다르고 기후가 다릅니다.

그래서 정확한 연비책정은 어차피 힘들답니다.

그리고 굴곡노선을 직선화시켜야겠다, 1%만 승객을 창출하면 70억 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시민들에게 대중교통으로서의 역할을 같이 부담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또 버스전용차로를 활용하자, 단속을 강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본 의원은 시장님께 이런 건의를 드립니다.

감차제도를 도입했으면 합니다.

지하철 개통과 아까 말씀드린 굴곡노선을 조정하면 감차요인이 발생합니다.

현재 965대의 지하철 개통 이전에 이 버스는 필요한 대수였습니다, 그렇지요?

○大田廣域市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金載京 議員 지금 지하철 1호선이 개통된 이후에 과연 965대가 필요한가 볼 때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大田廣域市長 朴城孝 동감합니다.

○金載京 議員 그래서 감차요인이 발생되면 발생한 대수를 시에서 매입을 해서 폐차를 하면 매입비가 한 3, 4개월이면 충분하겠더라고.

한 대 가동해서 소요되는 경비가 1일 약 39만원으로 볼 때 연간 한 대당 1억 4,200만원 경비가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 대당 4,000만원에 매입을 해서, 폐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매입을 해서 하면 1년에 한 대당 약 1억 원이 절감됩니다.

50대만 감차를 하면 얼마가 절감이 됩니까?

50억 원의 우리 시의 예산이 절감되는 것입니다.

이런 본 의원의 정책적 대안에 시장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大田廣域市長 朴城孝 김재경 의원님 관심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준공영제 관련된 개선사항은 일일이 나열하기가 어려울 만큼 많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개선방향을 합리적으로 하되 가장 큰 원칙은 이제 이 과정 모두를 공개해서 의원님들은 물론 전문가나 시민들이 모두 아시게끔 하는데 키폐인트를 두겠습니다.

그리고 경쟁원리를 도입하고 감독을 강화하고 효율을 증대시키고 편리한 대중교통이 되도록 하는 방향을 잡아서 거기에 맞추어 가겠습니다.

지하철도 이제 오픈이 되었고 하는 점에서 버스노선의 조정도 필요합니다.

이런 등등 많은 내용들을 같이 하겠습니다.

특히 한 가지 예를 들면 시내버스발전위원회가 있었는데 준공영제의 발족이 2005년 6월 28일날 되었어요.

그런데 14개월 동안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2006년 8월부터 금년까지 네 번 개최했습니다.

어떤 모든 일을 할 때 공개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이런 정상적인 과정을 거치면 오류는 훨씬 줄어든 것입니다.

그런 기본정신 하에서 의회와 전문가와 시민들의 많은 의견을 들어서 합리적인 버스제도 개혁안을 저희가 마련하느라고 기획팀도 만들고 전문위원회도 거치고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그럴 때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金載京 議員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도출된 문제점들은 조속히 시정을 해주시고 본 의원이 제시한 정책적 대안들은 하루빨리 교통정책 특히,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개선안에 도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榮寬 김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해 주신 박성호 시장님, 차준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 라. 이정희 의원(일괄질문)

(11시 49분)

○議長 金榮寬 다음은 이정희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議員 한나라당 비례대표 이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150만 시민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다른 열정과 비전을 가지고 시정을 펼치시는 박성호 시장님과 김신호 교육감님을 비롯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민들과 함께 고민해 왔던 3천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에 대해 시장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시가 숲의 도시 푸른 대전을 조성한다는 목표아래 금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200만 그루씩 총 3천만 그루의 나무심기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녹색환경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3천만 그루 나무심기는 민선4기 박성호 시장님의 핵심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도 이 사업이 미래세대를 위해 중요한 사업이라는 데는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본이 되는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세부적으로 준비되지 않아서인지 일선 현장에서는 많은 문제점과 혼선이 야기되고 있다고 하는 시민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우려는 시에서 나무심기사업 원년부터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데 기인합니다.

특히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나 각급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인 협력 없이는 성공하기 어려운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시장의 공약사업이라는 데만 초점을 맞추어 관 주도적으로 추진하다보니 현실성이 결여된 전시성 행정이 아니냐는 여론입니다.

그야말로 나무는 보되 숲을 보지 못하는 과오를 범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시에서 실천적 의지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위한 장기적 안목에서 전체를 조망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서 본 의원이 몇 가지 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숫자 3천만이라는 실적위주의 사업추진 문제입니다.

대전광역시의 3천만 그루 나무심기 추진계획표 1을 들여다보면, 교목을 455만 그루, 철쭉, 회양목 등 관목을 84.8%에 달하는 2,545만 그루 식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현황에서 보듯이, 대전광역시가 자랑하는 3천만 그루의 대부분은 큰 키로 자라는 교목이 아닌 작은 나무, 관목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3천만이라는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도시의 녹지공간이나 수종의 조화를 고려하지 않고, 실적위주의 물량만을 계획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갑니다.

시장님!

지금이라도 숫자에 얽매이지 마시고, 적은 양의 나무를 심더라도 조화가 잘 이루어진 아름다운 숲의 도시를 조성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현실적인 사업플랜을 재고할 의사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들이 식수하는 나무의 관리 문제입니다.

시에서는 금년 초부터 시민들의 나무심기 동참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참여를 유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관 및 단체들이 기념식수나 현수식재를 통해서 관내 여러 지역에서 많은 나무를 식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시민 현수동산인 중구 테미공원을 답사해 보았습니다.

테미공원에는 중구 요식업 등 여러 단체에서 현수한 왕벚나무 및 스트로브 잣나무들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왕벚나무가 제대로 자라면 수십 미터까지 자랄 수 있는 수종으로 알고 있는데 1m 간격으로 식재한 것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크게 자란 왕벚나무 밑에 교목성 상록수인 스트로브 잣나무가 밀식되어 있었는데, 왕벚나무 그늘 밑에서 제대로 자랄 수 있을지 의문도 갖습니다.

특히, 한발수목원의 경우에는 더욱 우려가 됩니다.

3천만 그루 나무심기에 대한 시민 및 사회단체, 기관 참여가 늘어나면서 한발수목원에도 많은 나무가 심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목원은 일반 공원과는 성격이 다른 수목원만의 고유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민들이 원한다고 수목원에 계획되지 않은 나무를 심어 기념식수 공원화로 만드는 것은 수목원 본래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수목원은 각종 식물에 대한 교육 및 연구기능 그리고 식물의 종에 대한 다양성과 보존기능 등을 가지고, 나무 하나하나 적합한 장소에 필요한 수종이 식재되어야 하며, 품종과 산지 등 정확한 이력을 지닌 나무를 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종의 보존과 학술적 기능을 할 수 있는 수종을 선별해서 심어야 하며, 심는 위치도 앞으로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전문가의 설계에 따라 철저한 계획 하에 심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한밭수목원은 수목원 조성의 기본계획에 의해서가 아니고 임시방편적인 기념식수나 현수의 장소로 활용하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우리 시와는 달리 나무심기 성공도시로 꼽히고 있는 대구광역시에서는 시민성금으로 시민식수공원을 만들어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갖고 식재 장소에서부터 수종 선택 등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관리계획 하에 나무를 심고 다 자란 후의 공간까지 확보하여 시민 식수공원을 조성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도 수목 식재 장소의 지역적 특성이나 생육환경 등을 고려하여 식재하는 방법을 벤치마킹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기금 모금에 대한 문제입니다.

시에서는 3천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범시민운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에 시민운동본부 등록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모금 목표액 300억 원이 너무 커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로 반려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목표액을 10억 원, 나중에는 30억 원으로 조정해서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았지만, 어찌 보면 다행일 수 있습니다.

만일, 최초 목표액으로 승인되었더라면 시장의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 시민과 기업들은 더 많은 준조세를 부담하는 어려움이 뒤따랐을지도 모릅니다.

그 이유는 푸른대전가꾸기시민운동본부에서 금년 6월 13일까지 접수한 기탁내역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금융권 8억 1,000만원, 건설업체 1억 5,500만원, 기관·단체에서 2억 2,060만원 등 대부분 대전시의 각종 사업과 관련된 기업들이었고 시민성금은 시 공무원을 제외하면 고작 7명에 6만 7,000원 뿐이고, 개인 현수는 11명에 13그루가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시민참여가 저조한데, 자발적인 시민동참을 어떻게 끌어낼 것인지, 또한 민간의 자발적인 사업기금 조성 방안은 있는지,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진인력 문제입니다.

우선 시급한 문제는 일선 구청의 인력확보 문제입니다.

서구청을 제외한 각 구청별 담당인력을 보면, 2명이 3천만 그루 나무심기운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역부족입니다.

그러므로 구청장과의 협의를 통해서 전담인력을 보강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시며, 인력보강 의지는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녹화 조성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먼저, 가로수 관리입니다.

우리 시 원도심 가로수의 경우 전선에 뒤엉켜 기형적인 수형을 보이고 있는 나무들이 많았습니다.

가로수 훼손을 막기 위해서는 전주·전선의 지중화가 급선무라고 봅니다.

한전이나 통신공사로부터 전주의 지중화를 협의하여 정제된 가로수 수형 및 녹지 기능을 조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구광역시의 경우 제1차 푸른 대구 가꾸기사업 시행초기에 무절제한 전주, 전선에 의해 가로수의 수형을 훼손시킨 것이 가장 큰 시행착오였다고 합니다.

그 후 대구시는 5, 6년 전부터 도심 주요 도로변 전주·전선의 지중화를 서둘러 가로수가 제대로 형태를 갖추고 잘 자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대전시내 곳곳에 있는 가로수의 경우 보호대로 인해 상처받고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가로수가 관내에 상당수가 있어 주변정리와 함께 가로수 보호대 정비 필요합니다.

또한 가로수는 수종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계룡로에 심은 백합나무는 생육환경이나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데다 관리마저 소홀해 다시 예산을 들여 은행나무와 느티나무로 교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대 정문에서 유성 시가지를 잇는 대로변의 메타세쿼이어는 도심보다는 천변이나 호수 주변에 식재하였을 때 아름다움이 배가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삭막한 도시 내에서 능수버들만큼 부드러운 경관을 제공해 주는 나무도 없는데, 70~80년대 유등천변 등지의 능수버들이 꽃가루 공해라는 잘못된 상식으로 대전지역 대부분의 천변에서 제거된 것은 큰 손실이라고 봅니다.

모든 수목은 각자의 생태적소에서 자연 상태로 자랄 때 가장 아름답다는 사실을 수종 선정 시 유의해야 할 기본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로변 전선 지중화와 가로수 특성화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통섬에 대한 것입니다.

시에서는 표2와 같이 최근 18개소에 약 18억 원의 예산을 들여 대형 소나무를 주로 많이 심었습니다.

교통혼잡 지역인 좁은 중촌동사거리에는 공해에 강하지도 않은 35그루의 대형 소나무가 떼지어 심어져 있기도 합니다.

혹시 시목이 소나무이니까 상징성만 내세워 즉흥적으로 수종 선택을 한 것은 아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고사목이 발생될 경우 시민의 혈세 낭비가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사회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입니다.

3천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교육으로 시민들이 공감하여 본 사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피부로 직접 감동을 느끼지 못한다면 아무리 많은 나무를 심는다 해도 그 가치나 의미는 퇴색된다고 봅니다.

시민교육을 통해 숲의 기능, 내력, 보존가치, 녹지 환경에 대한 시민의식 등을 함양시킬 수 있다면 3천만 그루의 절반만 심어도 나무심기 운동은 성공했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무심기에 대한 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제안 드립니다.

다음은 대전의 랜드마크공원 조성을 제안해 봅니다.

선진 국가들은 오래 전부터 인간과 환경 그리고 도시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를 고민해 오고 있습니다.

고민의 핵심은 자연을 지키고 함께하지 않으면 공멸한다는 위기의식입니다.

유럽 선진도시들의 도심 녹화율은 현재 25%에 이르고 있다고 하며, 이들은 도시의 녹지율을 4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도시 내 산림 확충계획에 심혈을 기울인다고 합니다.

대전광역시도 총면적 대비 64%의 충분한 녹지를 갖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린벨트, 외곽지역, 산림지역 등을 제외하면 시내권 녹지율은 11%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 중심부에 위치한 월평공원을 대전을 상징하는 랜드마크공원으로 조성한다면, 서울의 남산, 수원의 팔달산처럼 도심 속의 허파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공간의 구성과 관리에 대한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녹지 환경 조성은 후세를 위한 현세대의 배려라는 관점에서 미래지향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둘째, 녹지공간의 중요성이 우선적으로 강조되어야 하며, 도시의 확대 팽창을 구실로 무차별적으로 녹지공간이 잠식되는 일은 최대한 억제하고, 도심 속의 녹지를 확대하는 ‘숲 속의 도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셋째, 장기적으로 계속되는 녹지조성 사업에서 관련 전문가 및 사업 전담 추진기관의 견해와 경험이 존중되고 일과성이고 즉흥적인 구상이 배제되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넷째, 녹지공간 조성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은 최대한 수렴되어야 하지만, 이들 의견이 녹지 관련 기본 원칙을 벗어날 경우에는 홍보와 교육을 통해 잘못된 의견을 배제해야 합니다.

다섯째, 녹지 관련 사업예산에서 녹지공간 조성을 위해 필요한 부지 확보에 소요되는 예산은 지속적으로 배정하여야 합니다.

여섯째, 녹지공간 조성사업은 민, 관, 산업 및 공공단체의 관련 주체들이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것보다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서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일곱째, 녹지공간의 유형별로 그 조성사업 추진 시에 기술적인 세부 원칙이 엄격

히 준수되어야 합니다.

여덟째, 도심 녹지공간을 확대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건물, 주택, 각종 시설단지 간의 울타리를 철폐하여 연속성이 강조된 녹지공간이 조성되도록 법적인 조치와 행정적인 지원을 하여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대전시 녹지공간 조성에 필요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시장께서 우선적으로 반영할 용의가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3천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과 도시림 조성은 현재에 살고 있는 우리들만을 위한 일이 아니고 우리의 자녀와 후손을 위한 성스러운 과업입니다.

시장님의 저서에서 쓰고 있는 ‘다리를 놓는 사람은 자기가 건너기 위해서가 아니라 뒷사람을 위해 다리를 놓는다’는 행정철학과 같이 이 사업은 후대를 준비하는 미래사업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무심기는 녹지에 대한 기본철학을 가지고 사람에게 맞추기보다는 자연과 어우러진 녹지조성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3천만 그루라는 양적인 정책보다는 시민들이 직접 느끼고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자발적인 시민운동으로 승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3천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이 가시적인 성과에 매달려 인위적이고 무리한 사업이 되지 않도록, 시장께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참조)

· 이정희 의원 시정질문서  
.....

○議長 金榮寬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의 시정질문을 마치고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문을 듣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議長 金榮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태훈 의원님 또 권형례 의원님, 이정희 의원님의 일괄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  
·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 대전광역시교육감)

○議長 金榮寬 먼저, 박성효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大田廣域市長 朴城孝 오전에 김태훈 의원님, 권형례 의원님, 김재경 의원님, 이정희 의원님께서 시정에 관한 좋은 지적과 대안들을 제시해 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김재경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일문일답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답변드리는데 순서는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양해해 주시면 모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종합적인 답변을 드리기 전에 의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모름지기 1년을 거쳐왔고 그 와중에서 우리가 정례회를 맞았습니다.

이런 제제에 돌이켜보면 참 시정을 이끄는 데 있어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의정의 어떤 질이나 아니면 행정사무감사나 의정활동의 모습도 제가 지금까지 시에 근무하면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어느 때보다도 정말로 열심히 하시고 공부하시는 모습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신 점에 대해서 존경을 표합니다.

우선 지난 1년을 돌이켜 보면 나름대로는 우리가 시민을 중심으로 해서 시정을 펼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고 바른 행정을 하겠다는 취지하에서 나름대로는 이끌어왔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은 이제 시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새롭게 저희 직원들과 분위기를 맞추는 소위 기틀을 다지는 한 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시정의 어떤 행태도 이제는 시민들의 참여와 또 그에 따른 홍보 아울러서 행정시책이나 결과에 대한 평가 이런 부분들이 늘 시정의 흐름속에 녹아들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왔고 아직은 미흡합니다만 그런 틀로 계속 시정의 기초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우리 지역에 있어서도 주변기관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고 또 각종 국제 시책에 대한 지적에서 있었던 바와 같이 중앙과 지방의 협력 또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먼저, 우리 지역 내에 모든 기관과의 수평적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일이 과거와 달리 새롭게 시작을 했고 거기에 따른 성과들도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구체적인 일로써는 아마 맨 처음 와서 경부고속철도 주변정비사업이 다소 3,000억 원대 초반의 사업비로 어려움을 겪던 것을 다들 도와주셔서 5,000억 원 규모의 사업비로 확장한 일과 또 도시철도1호선이 그간에도 우리 선배공무원이나 또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참아서 1호선이지만 4월에 개통한 일이 큰 기억에 남습니다.

아울러서 IAC 2009 행사를 유치한 일 또 스마트시티 내 최근에 일본의 자본을 유치한 일들, 또 3,000만 그루 나무심기운동에 많은 시민이 협조해 주신 점 또 어려운 지역을 우리가 개선시키는 무지개프로젝트, 신탄진 일대에 대한 개선을 위한 신탄진프로젝트 아울러서 원도심의 U턴프로젝트 또 인근 시·군과 협력을 위한 소위 G9프로젝트 등 나름대로는 창의적인 시정을 펴기 위해서 애써왔다고 자부를 해봅니다.

물론 아직 가시화되지는 않았습시다만 이런 것들이 가시화된다면 의원님들로부터 좋은 평가받기를 기대해봅니다.

이런 많은 협조 덕에 외람 되게도 한국 경제를 빛낸 경영인대상 환경부문에서 수상을 했고 지방자치경영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도 함께 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점에 감사드리고 다시 한 번 아쉬운 점이 있는 것은 늘 지적하신 것처럼 산업단지 부족문제로 아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문제와 대덕특구에 대한 조기 가시화가 아직 미흡한 점, 아울러서 자기부상열차와 관련된 사업 유치 건에 있어서 애를 많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유치하지 못한 점이 마음이 아픙니다.

또 최근에 주택투기 과열지구 해제를 여러 다방면으로 건의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 해제가 안 되었습니다.

조만간 되리라고 전망합니다만 아직 안 된 일, 또 준공영제와 관련되어서 버스와 관련된 파업과 시민의 불편을 드린 점이 죄송스럽게 생각되면서 오히려 이런 계기가 오히려 바람직한 버스환경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좋은 점도 있다고 봅니다.

하반기에는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관철할 계획이고요, 아울러서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로봇랜드 유치 건 또 지난해부터 저희들이 마음을 쓰고 힘을 합해온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육성하거나 유치하는 일에 점점 매진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가져봅니다.

그러면 이제 개별적으로 김태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훈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구 출신 의원님답게 저희 집행기관에서도 느끼고 있는 중구에 대한 현안사안들을 정확하게 적시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셨다는 점에 대해서 일련의 의정활동을 하시면서도 상당히 심도있는 활동을 해주신 점에 경의를 표합니다.

우선 경제문제 활성화에 대해서 관심을 주셨듯이 투기과열지구 해제 문제, 기업 유치 및 투자유치 문제,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국책사업 유치 문제, 특히 중구 공동화 해소방안 등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 투기과열지구 해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모든 내용이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저희로서도 중앙정부에 수차례 건의하고 있는 내용이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지역은 주택 매매가격이 올라갔는데 우리 지역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미분양주택도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앞으로 우리 지역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또 서남부권을 통해서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틀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누차 강조했습니다.

그간에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될 때 저희가 누락되자마자 충청권 단체장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해서 촉구를 했고 아울러서 우리 지역에 있는 11개 단체도 촉구를 했으면서 의회에서 힘을 보태주셨습니다.

최근에도 건설교통부도 방문해서 촉구를 했고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관련된 행사를 할 때도 건설교통부장관이 바로 옆에 있어서 우리 지역의 심각한 사정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8월 초순 정도에 검토를 하는데 저희로서는 충분히 지역의 의견들이 반영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해제 문제는 단지 부동산 또 거래상의 문제만이 아니고 정말로 어려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문제와도 직결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이런 문제들도 중앙정부에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계기가 마련되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경제 활성화와 비전, 목표 및 기업투자유치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나름대로는 2016년을 목표로 해서 대전경제발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취약한 제조업 분야의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산업간 권역간 불균형을 해소하면서 특히 서비스 분야에 대한 육성전략을 세우고 개인 서비스업은 고부가가치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장기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는 것처럼 경제 문제라는 것이 하루 이틀, 한두 달 사이에 가시화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강조하시는 기업 및 투자유치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인근 충남·북에 정말 부러울 정도의 많은 투자유치가 되어 있습니다.

진심으로 부럽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한 마디 더 변명이라고 보기보다는 좀 차이가 있다는 점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충남·북은 대개 석유화학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유화산업 등이 유치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천안·아산은 삼성이라는 대기업의 바탕 위에서 관련 산업들이 유치가 되고 아울러서 가장 큰 메리트는 그 지역의 저렴한 토지가입니다.

충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광역시라는 도시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규모의 석유화학산업도 유치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저희 실정에 맞는 기업들이 들어와야 되는 형편이고 토지값 또한 인근 도와 비교해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것이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유치해야 될 기업의 대상은 자명해집니다.

지식산업이라든지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 또 거기에는 종사하는 종사원들의 삶의 질이 높은 쪽이 요구되는 그런 업종 이런 것들이 저희들에게 들어와야 될 주종의

대상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한 일들이 잘 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송구합니다.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 의원님들 보시기에는 아직 미흡하리라고 봅니다.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우선 투자유치전략으로써 산업용지 확보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대덕특구 내에 1단계, 2단계 개발계획에 단계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것을 동시개발로 추진하도록 토지공사 또 과학기술부 이런 쪽과 긴밀한 협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동시개발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내서 협약식도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2009년도 말에는 아마 산업용지가 제공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전망을 해봅니다.

이 이외에도 시가화 예정용지 내에 저희들이 토지 형상이나 주거 여건을 고려할 때 적절하게 조정을 하면 산업용지화시킬 수 있는 용지도 찾아서 그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마 2010년 정도 되면 산업용지로 공급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특히 서남부권, 신탄진 지구 등 개발지구 내에 용지확보를 포함해서 330만 평방미터를 확보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대도시에 적합한 고부가가치의 지식산업 등을 유치하고 연구단지에 걸맞는 성과와 연계한 벤처창업을 촉진하는 일이 또한 과제입니다.

특히 여성들이 일자리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콜센터 등 서비스산업 유치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참고로 그동안에 우리 시에서 유치한 실적을 보고드리면 2006년 하반기부터 2007년 상반기까지 거의 1년입니다.

이 동안에 114개 업체가 유치되어서 2,000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안에는 콜센터 유치에 대한 실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2006년에는 웅진에너지, 한진택배 등이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큰 기여를 했습니다.

또 2007년에는 IT 전용 벤처타운과 또 아파트형공장 등에서 큰 기여를 해서 기업유치 내지 고용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를 했습니다.

금년 8월에 대덕테크노밸리 내에 있는 잔여 용지를 분양하면 약 40개 업체 정도가 들어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도 충분한 고용효과가 나타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토털 해보면 지금까지 투자유치를 31건에 3,389억 원 정도로 실적을 거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내용은 도시철도운영 시스템구축사업과 또 스마트시티 내에 일본 자본을 유치한

일 또 외국기업 투자부분 코트라와 연계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에 투자된 것까지 포함을 하면 투자 유치가 31건에 3,400억 원 정도로 1년간 추정이 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첨단의료산업단지하고 로봇랜드 유치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시는 아시는 것처럼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다양한 연구소가 있습니다.

또 대학이 상당 부분 많이 있어서 인재 공급에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욕심으로 보면 정부에서 발표하는 어떠한 시책도 우리 지역과 무관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발표할 때마다 저희는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제안서를 제출하고 유치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기부상열차였는데 참 유감스럽게도 아까운 탈락을 했습니다.

이제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로봇랜드 조성에 대해서 오늘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달에 그것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총동원해서 유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왜 우리 지역에 로봇랜드가 적당한 지에 대해서는 아마 의원님들도 이미 다 아시리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로 드리고 생략하겠습니다.

특히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문제는 제가 시장선거에서 당선되었을 때, 이제 당선자 시절이지요, 그때 6월 중순쯤에 일부 전문가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전부터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육성을 여러 차례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반응이 없었다 그래서 새로 된 시장한테 와서 강조를 한다고 하는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때 당선자 시절에 듣고 바로 취임해서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에 대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에 유치위원회도 만들고 자문위원회도 만들고 TF팀도 만들고 또 아울러서 조성전략도 수립을 하고 포럼도 만들고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많은 일들도 체계적으로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제에 정부의 방침이 유동적이었다가 다소 바뀌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제일 처음에는 그것을 하나의 단지화 시켜서 하겠다 하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가 그 후에는 각각 분리한다는 의견으로 또 용역을 정리하다가 최근에는 다시 그것을 복합화한다는 개념으로 정립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내년 2, 3월에 위치를 정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그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구성하는 단계에 있다고 동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차원의 동향과 상관없이 저희로서는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우리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나 대덕연구개발특구의 활성화에 직접적이고 중요한 연관을 맺고

있다고 보고 이에 따른 많은 후속조치들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아마 최근에 카이스트에다 별도로 용역을 준 용역결과도 8월중에는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전방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더불어서 우리 지역 출신 국회의원 또 여기에 계신 시의원님들 또 각계 인맥들을 찾아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단지 이런 부분들이 늘 경쟁을 갖고 있는 대상이 아시는 것처럼 인천입니다.

대구, 원주 이런 특성을 각각 갖고 있는데 인천이 지금 크게 부각되고 있는 이유는 항공로와 항만 또 수도권과 밀접도, 수요의 충족 이런 많은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 정부에서도 인천에 대한 경제특구라는 이름 하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는 그런 추세에 있어서 다소 힘겨운 상대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수도권의 밀집된, 지원 자체가 적절치 않다는 논리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논리에다가 지방균형발전이라는 논리까지 보태서 이 부분을 강하게 어필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로봇랜드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이 부분도 유사한 지역과 또 다른 경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일들이 지역에서 동시다발로 벌어집니다만 의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힘을 보태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또 김태훈 의원님께서 중구 공동화와 관련되어서 보문산 일대 또 안영동에 있는 경륜장 부지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우선 원도심 활성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초기보다는 이제 많이 개선이 되어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 입장에서는 출신지역이기 때문에 더 많은 욕심이 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저희가 숫자로 보면 '98년도부터 원도심에 대한 강조를 해와서 그 사이에, 민간부문도 포함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만 1조 6,000억 원이 넘는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인구도 증가하고 공실률은 감소하고 재래시장의 매출은 그래도 증가하는 것으로 지표가 나옵니다.

'98년에 비해서 중구에 2006년도 인구는 한 5,000명 정도 늘었습니다.

공실률은 한 12% 정도 감소를 했고 이제 추이는 되어 가는데 지하철 영향인지는 몰라도 중앙로역 중심 식당가도 손님이 다소 늘었다고 지표가 잡히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의류판매업도 한 10% 정도 손님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특히 중구의 경우에는 우리 도시정비사업의 78개 지구 중에 44개 지구가 중구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마 중구에 가보시면 새로운 건축들이 그래도 눈에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은행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아주 이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정비사업으로써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에도 진행이 순조롭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은행1구역사업이 정비가 되면 아주 새로운 모습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이고 아울러서 중구는 아니지만 역 중심으로 한 대전역의 철도시설관리공단의 본사가 완공이 되면 2009년말 정도 완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상주인구가 2,000명입니다.

그뿐더러 역세권의 개발이 이루어지면 그 발전이나 성장효과가 전후로 연결이 되어서 원도심에 중요한 기대가 되리라고 봅니다.

특히 걱정하시는 보문산 지구는 사실 민원으로 인해서 '94년부터 운영해오던 고도제한이라는 규제가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시민들의 생활에 아주 불편하고 민원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고도제한에 대한 문제를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금년말까지는 좀더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서 시민들 불편이 해소가 되고 또 경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켜가면서 서로 조율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금년안에 만들어서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정동 일대에 있는 플라워랜드도 200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형편상 조금 진행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사정공원, 뿌리공원, 플라워랜드를 연결해서 관광벨트화 하자!” 하시는 제안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특구라고 하는 법적 개념으로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

아마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표현이 특구의 개념이지 법적 개념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관광벨트화하는 사업을 해서 그 주변에 대한 관광객을 늘리고 그 주변 활성화를 기하자 하는 주문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동물원에 대해서도 동물원이 이것이 수익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과 따져보면 우리 동물원이 그래도 꾸준히 노력을 해서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아울러 재정자립도도 한 80%를 넘어서 다른 지역에 있는 동물원과 비교해 볼 때 월등하게 자립도는 높은 편입니다.

아울러서 동물원과 플라워랜드 지금 김 의원이 지적하신 대로 뿌리공원 또 사정공원 등등을 다 연결해서 이동로를 확보한다든지 프로그램을 좀더 잘 개발한다든지 하면 지금보다 적자도 좀 줄이고 관광객의 숫자를 더 늘릴 수 있겠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구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2011년까지는 종합테마파크로 도약하기 위한 중·장기계획이 실천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경륜장 부지는 그간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2005년 12월 29일날 경륜장 불허가 통보가 된 이후에 담보 상태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그러한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의 요구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하자 하는 주문이 있었고 구청에서는 물류센터 또는 실버타운, 여객터미널 또 국악예술인마을 등등 여러 가지를 놓고 지금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주변을 볼 때 여건으로 봐서 상당히 개발이 필요한 지역입니다만 아직 도시계획상 용도의 문제가 아직 남아있고 또 이 지역에 형성되고 있는 높은 지가가 어떤 구상을 하기에 조금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금년 말까지는 우리 발전연구원에서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안이 나오면 의회에도 보고드리고 협의를 거쳐서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이전 문제인데요, 이것도 시장이 되면서 보니까 현재 있는 농업기술센터가 도심의 한복판이 되는 그런 형국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위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봐서 그것을 매각하고 그 재원 가지고 우리 지역 농민들이 많이 거주하거나 농사를 많이 짓는 지역에 적절하게 배분해서 종합적인 복지기능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추진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우리 동네에다 좋은 것을 갖다 봐달라는 요구들이 강해서 몇 차례 의견을 조율했는데 지적하신 것처럼 일부 전문 의견은 지금 토지여건으로 볼 때 목달동이 비용이 덜 드니까 거기다가 하자는 주장도 강하게 있습니다.

아울러서 농민의 수나 이런 것을 볼 때 유성에다 하자는 의견도 적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이런 부분들이 농민들을 위해서 복지적 개념으로 추진하는 일이기 때문에 농민들의 이용이나 또는 효과 이런 것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결과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체가 시기적으로는 시간이 걸렸습니다만 또 시기적으로 그렇게 시급하다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갈등있는 요소들은 시간을 갖고 서로 이해와 조정을 거쳐서 해도 그렇게 크게 무리한 사업이 아니라서 시간이 소모된 점에 대해서 이해를 구합니다.

또 중구청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 다 산내 목달동에 지금 비어있는 공간 활용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어있는 공간에다 쓰기 위해서 한다 하는 점만으로는 생각하기에는 좀 미흡해서 다각적인 내용들을 검토하고 이용하는 농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조율해서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시간이 경과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충남도청 이전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주셨는데 충남도청은 3만 8,999km<sup>2</sup> 정도 규모고 비용으로 따지면 한 890억 원 정도 보입니다.

충남도의 계획에 의하면 2013년까지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전소재 주요 이전대상 기관이 204개나 됩니다.

이에 따라서 충남도의 어떤 재원계획을 만들어서 어떤 일정계획으로 이 계획을 추진할 지에 대해서 예의 주시하고 있고 이 지역에 대한 이전 문제 자체가 대전광역시와 협의 없이는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이전 적지에 대한 처리문제라든지 현재 도청이 위치하고 있는 그 지역 일대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래서 시·도 간에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일방의 의사만으로 되어질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더 긴밀한 협의체를 구성하되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본구상은 지난번에 시청의 이전 등을 통해서 겪어왔듯이 갑작스런 이전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따라서 그것의 대비를 미리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도청을 중심으로 볼 때 그 일대 지역은 역사성이나 이런 것을 볼 때 보존이 필요한, 지금 상황으로써는 박물관 같은 것과 더불어서 문화·휴식공간이 마련되면 좋겠다 하는 구상을 해봅니다.

아울러서 중앙로로 연결되는 부분도 이제 목척교 또 지금 중앙데파트와 홍명상가에 대한 철거논란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그것이 잘 되면 그 지역 일대를 거기 또 친수 공간화해서 대전에 들어오는 관문으로서 또 그 지역 일대의 상권 활성화 하는 그런 방향을 잡고 디자인을 해가면 서로 연결시켜서 원도심 활성화 내지는 발전의 계기를 만들어 가는 그런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아울러 최근에 보면 중구청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상당히 주민들의 활동이 청소년들이나 젊은 층의 활동을 증대시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중앙로 일대에 대해서 횡단보도 굿는 문제도 논의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 모두를 포함해서 지금 TF팀을 만들어서 도청 이전에 따른 대책들을 강구하겠습니다.

그것도 초안이 나오면 나오는 대로 바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의 조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에 대한 지원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장인 저도 공약을 하거나 시장이 되어서 교육시장으로 이름을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가져왔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교육에 투자입니다.

그런 인식하에서 우리 교육 관련된 부분에 관심을 갖고 시책도 개발하고 예산도

감양껏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정교부금과 비법정교부금 합해서 금년에 2,104억 원이 교육청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비법정전출금 규모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작년에 1년동안에 120억 원이 갔습니다.

금년은 현재까지 90억 원이 나갔습니다.

또 교육협력관제를 뒤서 좀더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고 교육정책협의회도 좀더 실질적이고 내실있게 운영하면서 빈도도 높여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공약으로 말씀드렸던 사항 중의 하나가 학교공간을 지역사회의 중심 센터화 만들어가겠다는 방향을 잡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초기기 때문에 아직 여러 군데에서 혜택을 보지는 못합니다만 이것이 점차 연도별로 쌓여간다면 그래도 많은 학교환경이 개선될 것이고 인근에 있는 주민들께서 학교도 지역사회의 공간으로 느끼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겠습니다.

아울러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대전교육발전 4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2010년까지 7개 분야 40개 사업에 1,427억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으로 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김태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고요.

다음은 권형례 의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저출산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가장 중심적인 화두가 저출산 고령화라는 것이 국가적 과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주 공감을 하고요 또 빈곤아동에 대한 문제, 장사에 대한 정책, 정말로 시에서 복지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핵심 분야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핵심 분야로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고 재정지원 또한 만만한 게 아니라는 점이 저희들이 안타깝게 느끼는 점입니다.

우선 저출산 담당부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업무가 강조될 때마다 그 부서를 만들어내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의 인력이 그것을 하는가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갖고 하는가도 중요합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선 국가에서 가장 많은 힘을 들여서 추진해야 될 그런 제목의 숙제입니다.

지방에서도 많은 시에서 인식을 같이 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임신과 출산 지원, 보육료 지원, 다자녀 가정 우대하는 문제 등 저출산과 관련된 시책들을 나름대로는 개발해서 이제 막 시동을 걸고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얼마나 효과를 주는가 하는 부분도 되짚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출산이 양육의 문제에만 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이제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의 변화도 또한 중요한 원인으로 보고 있는 거지요.

아울러서 이런 문제를 큰 과제로 보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에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을 금년 4월부터 발주해서 금년 말까지 연구용역을 하도록 과제를 부여했습니다.

체계적인 연구결과가 나오면 아무래도 좀더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 틀이 생길 겁니다.

그때 봐서 저출산고령화담당 아니면 팀을 보강하는 계획까지도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또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아직은 저희는 출산장려금이라는 명목으로 지원한 예는 없는 게 사실입니다.

일부 부산, 인천, 대구, 울산 이런 데서 20만원 내지 30만원 범위 내에서 출산장려금을 줍니다.

저희는 셋째아 출생 후 35개월까지 월 20만원씩 보육료를 지급합니다.

이것은 토털금액으로 따지면 700만원이지요.

이런 사안에 대해서도 다른 도시와 차별화되는 우리 시의 지원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출산과 관련된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정돈해 보고 그것이 중복성을 좀 피하고 효과성을 봐서 정돈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시책이 한번 시혜적 사안으로 주게 되면 그것을 다시 없애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항목이 신설될 때마다 있는 것은 줄어들지 않고 새로운 것은 늘어나기 때문에 재정적인 어려움을 크게 가중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출산장려금을 30만원씩 줄 경우에 연 한 5억 원이 들어갑니다.

아동양육비 지원이나 육아휴직 확대에 대해서도 강조를 하셨는데, 가정양육 영·유아 수가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 4만 3,593명으로 가정양육비의 47%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양육비를 1인당 월 10만원씩 지급한다면 연 523억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복지라는 게 늘 그렇듯이 욕구나 바람은 있으되 재정적인 여건이 늘 한계를 결정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재정적 여건이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이런 사안들도 출산과 관련된 대책에 대해서 정부가 좀더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기를 건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고 계제에 보고를 드리면 정부에서는 복지에 강조를 해서 많은 시책과 지원을 한다고 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물론 자금을 댑니다.

그렇지만 기초라든지 광역이라든지 자치단체에서는 거기에 따라가는 비용을 대기

에 숨이 가쁠 정도로 힘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제도는 있으되 하지 못하는 일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일 중에 하나가 노인교통수당 지급했던 사항입니다.

이제 그 분야가 정부에서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인들에 대한 보험제도가 다듬어지면서 전국적으로 통일시켜서 합리화시키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수당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재정적인 여건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육아휴직제도에 대해서 맞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작년에 5명인데 출산여성 공직자가 예전처럼 이제 많지 않습니다.

그런 점이 또 그 숫자에 적용돼 있고, 그 여성 공무원이 그것을 신청하기에 지금 제약이 있거나 분위기를 압박하거나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청이 되면 당연히 그것은 허락을 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권고를 하겠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이게 좀 확대가 될 계획에 있습니다.

육아휴직 대상도 3세 미만에서 6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과 임신중인 공무원으로 확대가 됩니다.

또 육아휴직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육아부분에 대한 제도적 틀이 많이 개선된다 하는 것도 보고드립니다.

빈곤아동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정말 가슴 아픈 부분입니다 빈곤아동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희망스타트 시범사업을 했습니다만 그 내용은 전국 16개 시·도당 1개의 읍·면·동을 선정해서 취약지역 임산부, 12세 이하 아동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개소당 국비 3억 원을 지원합니다.

그렇지만 추진인력은 수행기관에서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참여 여부는 해당 자치 구청장이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2006년 5개 구를 대상해서 조사한 결과 대덕구가 희망을 했습니다만 2007년 확정시에 포기를 했습니다.

총액인건비제도 하에서 3명의 전담추진인력 확보가 어려웠던 데도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충청권에서는 아직 대전·충남·북이 참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 독특하게 추진하고 있는 무지개프로젝트를 통해서 취약지역 주민들을 살피는 사업이 있으며, 이는 상당 부분의 내용이 희망스타트사업의 내용과 비슷하거나 중복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공부방 운영, 저소득층아동에 대한 건강검진,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또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아동건강관리 프로그램 등등 몇 가지 사업은 중복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분야가 중복이 되거나 또는 중복이 안 된다 하더라도 빈곤아동에 대

한 문제는 시 전체적으로 힘을 기울여서 추진해야 될 근본적인 복지사무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부 연차적 확대계획이 보건복지부에 있습니다만 그것과도 참고를 하면서 빈곤아동 또 나아가서는 빈곤한 여성에 대한 문제에 종합적인 접근이 되도록 새로운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장사정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참 중요하고 필수불가결한 시설인데, 참 어려운 사업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어떤 시에서는 이러한 건을 가지고 기관장을 소환하는 문제가 제기될 정도로 민감하고 예민하고 어려운 사업인 게 사실입니다.

쉽게 말을 미리 할 수도 없고, 잘못 말이 전달되면 민원만 유발되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아주 어려운 사업이 장사문제와 관련된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의 화장률을 보면 2005년도에 45.6%에서 2006년도에 50% 정도로 보이면서 매년 3, 4%씩 느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화장하는 총 내용 중에서 관내와 관외가 한 반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로 보면 2009년도부터는 관외 화장을 제한하는 것이 우리 지역 내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을 끼치지 않을 거라는 판단이 됩니다.

현재 시에서 2004년에 장사시설종합단지조성용역을 추진한 결과 대상입지 중에 괴곡동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조사된 게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가수원지역 일대를 비롯한 많은 주민들이 극심한 반대를 했고, 시의회에서도 연관된 의원님께서도 큰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런 일 때문에 이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수정이 돼서 정림동 화장장 주변 명암마을 주민들은 또 화장장 이전 혹은 공원화 현대화를 요구하는 부분과 맞물려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입니다.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그런 시설들은 집단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다들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용역에서도 아마 그렇게 권고가 나왔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안이 용역결과만 가지고 바로 추진되기가 어렵다는 것도 시의원님 여러분께서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이런 복합적인 문제를 고려해서 장기간을 가지고 또 필요한 부분에는 다른 시설들에 대한 시설 입지와 결정과 추진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좀더 많은 벤치마킹을 통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듣기에도 어떤 시에서는 이런 시설을 하면서 운영권 자체를 그 동네에다 쥐버린 예도 있고 해서 어려운 시설이 들어갈 때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충분히 보장해주면서 주민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추진한 예도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참 많이 필요하고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수요를 정돈하기 위해서 저희로서는 이미 도시계획절차도 다 완

비가 돼 있는 현 화장장시설을 우선 현대화한 후에 단계적으로 명암마을 공원화사업을 추진하고 좀더 근본적인 문제는 좀더 심도있는 논의와 다른 사업의 벤치마킹 등을 거쳐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장사단지에 있는 부분을 보면 화장로 자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화장로를 좀 증설을 하고 가동하면서 노후된 화장로를 동시에 보수하는 문제와 또 유족들에 대한 편의를 위한 편의시설을 좀더 보강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우선 급한 부분을 처리하고, 장기적으로는 종합적인 방향의 검토를 심도있게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서 또 어떤 부분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사안이 있다는 것도 의원님 여러분께서 해아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충남도와 광역장사시설을 협의할 의향을 물으셨는데, 일부 충남 홍성은 이미 운영을 하고 있고, 공주, 천안, 세종시에서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도 우리 지역의 여건과 진행상황과 이런 것을 고려하면서 충남도와도 협의해 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들이 다른 지역에서도 보듯이 그렇게 쉽게 결론이 나지는 않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또 공설묘지 재정비문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현재 유·무연 분묘를 다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분묘이장이나 수목장 등을 통해서 현재의 구봉산 밑에 있는 공설묘지로 정비해 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정희 의원님께서 우리 나무심기와 관련해서 많은 지적을 주셨습니다.

우선 나무심기와 관련해서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도 솔선 참여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나무심기를 주창한 데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 이해하시는 것처럼 이제 도시의 경쟁력은 경제력일 수도 있지만 도시의 환경, 문화 이것으로 대변되는 삶의 질이라는 것이 도시의 가장 강력한 경쟁력으로 대두될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특히 환경과 관련해서 제1위적 요소는 나무를 심는 일이라는 데 확신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주변에 3대 하천을 잘 가꾸는 일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인식해서 나무심기운동을 추진합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나무심는 과정에 있어서 예산을 들일 수도 있고 민간부분과 협력할 수도 있고 다양한 채널을 활용합니다.

지금 어떤 장소에 나무를 어떤 나무를 심느냐 하는 문제가 구상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공공시설을 할 때 나무를 새로운 관점에서 봐서 제대로 심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각종 도시개발과, 건축과 관련된 부분에 이제는 나무심는 문제를 좀더 강하게 부여해서 건축 시나 개발 시부터 나무심는 제도가 좀더 제대로 틀이 잡히도

록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도시개발과 관련된 부분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까지도 강구를 해서 다양한 분야에 관련돼서 우리 지역에 나무심기운동을 총체적으로 전개를 합니다.

금년은 첫해입니다.

3,000만 그루 나무심는다는 것은 1년에 200만 그루를 심어서 2020년까지 한 15년 계획을 갖고 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교목과 관목의 비중이 적절치 않을 수도 있고 또 바뀔 수도 있고 진행사안에 따라서 조정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문제는 도시에 나무를 심어서 녹지율을 올림으로써 쾌적성을 확보하고 열섬효과(heat island effect)를 줄이고 또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확보하는 등 해서 다목적의 취향을 갖는 것이 큰 목적입니다.

그런데 나무심는 방법에 있어서는 예산으로 사서 심는 것도 있고, 이제는 시민참여가 중요하기 때문에 시민들 참여를 촉구하는 문제에 있어서 기념나무 심기를 전개하고자 합니다.

출생기념, 결혼기념, 회갑기념 이런 등등의 기념일에 내나무갖기운동을 할 것이고 또 테마별로 체육과 관련된 부분에는 체육동산, 문화·예술과 관련된 부분에는 문화·예술인이 기념해서 심는 문제, 각종 기관과 단체에서 성과가 있을 때 심는 기념나무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나무심기운동 체계를 갖추니다.

물론 지적하신 것처럼 관리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원 여러분께서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인정을 해주셔서 녹지관리부서에 과를 하나 신설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 3,000만 그루 나무심기운동과 관련된 체계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노력이었는데 의원님들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셔서 저희가 더 분발해서 제대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3,000만 그루 나무심는 문제가 숫자에만 매달리지 말라는 지적에 공감을 하고 숫자에만 매달리지는 않고 식재의 질, 녹지공간의 질 이런 쪽에 관심을 더 써서 추진하겠습니다.

또 그 사이에도 나름대로는 회의를 거쳐서 나무심기기본계획이라고 해서 만들어 뒀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또 전문적인 지식이나 업무를 해가면서 지적되는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가미해 가면서 어떤 계획이 한번 했다고 해서 고정시키는 게 아니고 계속 진화시키고 생물처럼 변화시켜가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럴 때도 많은 조언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금년에 목표를 이렇게, 업무를 하다보면 실적 대 목표라는 게 나오는 것이 저희들의 행정에 어떤 한 패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숫자적으로 보고를 하고 추진하게 됐는데, 초창기여서 그랬는지 몰라도 시민들의 동참이 많았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계획한 시민식수 물량의 두 배가 추진이 됐습니다.

모든 일이 처음에는 이렇게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지만 시간이 갈수록 조금 흐지부지해지는 예가 상례입니다.

이것을 지속화시키기 위한 틀로 만들어가는 제도적 장치도 이번 금년 안에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기념식수와 관련해서 한발수목원 걱정을 주셨는데요.

안 그래도 한발수목원이 지금 단계별로 두 군데서 나뉘지는데, 전적으로 한발수목원의 목표에 대해서 아니면 기능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따라서 그런 취지가 해가 되지 않도록 한발수목원의 식재계획과 맞춰서 맞는 수종을 알선하고 선정하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계획된 예산을 가지고 기념식수하는 부분이 들어오면 좀 절약이 되기 때문에 그 절약된 부분은 좀더 보강적인 식재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두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게 그냥 단순한 기념공원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가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마침 테미공원 질문주신 문제는 정말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일을 하다보면 이런 저런 곳에 일일이 손길이 못 미쳐서 다소 미흡하고 시행착오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음 식재기간 전에 집중적으로 이런 문제를 재점검하고 특별히 잘못된 문제가 있다면 감사권을 발동해서 시정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무를 관리하는 문제에 훨씬 더 많은 노력을 들여서 심은 나무가 버려지거나 죽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데 공감을 하고 그런 틀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테미공원에 단체에서 많이 주셨는데, 잘 지적하셨는데 이번에 보완하겠습니다.

좀 빼낼 것은 빼내고 정돈을 시키겠습니다.

또 소나무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많은 말씀을 주신 것을 듣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소나무가 참 비싼데 왜 그렇게 많이 심나?’ 하는 걱정을 시민들이 많이 하셨어요.

또 어떤 분은 ‘소나무 심으니까 참 좋다’ 이제 두 부류가 계신데, 소나무값이 비싸니까 한 그루 갖고 다른 좋은 나무 한 대여섯 그루 더 심어도 좋지 않느냐 하는 논란이 있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식재시기가 지나서 그런 부분들을 반성을 하고 잘된 것 잘못된 것을 해서 앞으로 우리가 3,000만 그루 나무심는 데 반드시 반영을 해서 개선된 사안으

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무가 죽은 것을 좀 추궁해 봤더니 나무심을 때 소홀히 해서 이게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크게 질책을 했습니다.

이미 심을 때부터 내집에 나무심는 것처럼 관심을 갖고 심어야 이게 잘 살동 말동 하는데 좀 소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확인된 대로.

소나무 몇 그루 죽은 것을 지금 지적하셨는데요, 그것도 앞으로는 그런 시행착오나 미흡한 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에 나무심기운동 관련해서 지금 개발위원회에다 기금을 받아들이는 창구를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현금과 현수가 있게 되는데 그 당시로써는 개발위원회가 그 창구를 맡는 게 적절했습니다.

시의 어떤 지원을 받는 부서는 그런 것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년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범위의 금액을 가지고 기부금신청을 했는데 행정자치부에서는 10억 원 이하이면 시장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끼리 한번 해보고 나중에 보자 하는 형태로 한 달 이상을 갖고 있다가 그냥 반려시킨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 업무하는 형태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불만이 있지요.

반려시킬 것 같으면 바로 반려하지 한 달 동안 가지고 있다가 똑같은 내용으로 반려해서 그냥 10억 원으로 우리 시 자체 내에서 승인하는 것으로 처리했던 사안입니다.

그리고 그 실적이 좀 올라가니까 다시 저희가 추가해서 승인은 받았는데, 당초에는 거기에 우리 시민 한 분이 유성시민의 숲에 기증한 사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안들도 거기에 다 포함해서 개념화시키려고 개념을 그런 정도로 설정을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부분이 잘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절차를 밟아서, 100억 원 규모의 시민의 숲 조성하는 사업은 다른 절차를 밟아서 기부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추진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것은 많은 시민의 참여인데, 제일 중요한 게 우리 동단위에 서 직접 주민들이 내동네 주변에 작은 공원들을 만드는 운동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포함해서 우리가 동정을 평가하거나 아니면 동에 어떤 시책사업비를 줄 때 경쟁요소를 동원해서 동에서 동정도 활성화하고 그것을 계기로 시정이나 여기서 강조하는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요, 나무심는 것도 시민들이 접근하기 편하게 전용 사이트도 하나 만들고 또 나무심기 원스톱 처리하는 시스템도 갖추면서 나무심는 대상

자에 대한 지도를 만들고 해서 체계적 관리할 그런 계획이고, 특히 여기에는 전문가들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그룹도 조직화해서 일일이 자문을 받겠습니다.

또 지역별로 하천주변에는 어떤 게 좋다는 의견이 다양합니다.

이정희 의원께서 향수에 어린 능수버들 얘기를 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좋았는데 또 그 당시의 여론이 그것은 알레르기도 있고 해서 안 좋다고 해서, 이 나무도 좀 유행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유성에 이팝나무를 심어놨더니 그것 참 좋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 지역에 관련된 지역 주민의 의견들도 분명히 고려해야 될 사안이다 하고 인식을 합니다.

결국 그 주민들이 거기서 즐거움을 찾기 때문에 주민들이 좋아하는 나무 또 그 생장요건 이런 것들도 많이 고려해서 의견을 받아서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인력이 문제가 되는데요, 시의 인력은 의원님들이 인정 해주셔서 나름대로는 보강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더 체계 있게 하고 관리시스템을 보강하겠습니다.

구청에는 구청장이 업무형편을 고려해서, 총액인건비제가 되니까 어떤 업무의 비중에 따라서 조정을 하게 되는데, 협조를 좀 구해보겠습니다.

나무심는 일을 가지고 걱정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잘 심어야 하는 것이 걱정이라는 측면이지요, 그래서 설득을 해서 인력이 좀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도심의 가로수 전지나 지중화 문제인데, 지중화하는 데 1m에 400만원 정도 드는데요.

이게 지자체하고 한전하고 반반씩 부담하는 겁니다.

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선뜻 나서지는 못하지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전지하는 것도 소위 강전지를 해서 이게 나무인지 막대기인지 모를 정도로 만들어놓는 그런 행태를 많은 분이 지적을 하셨어요.

왜 이렇게 이게 안 고쳐지나 싶었는데 통상 그분들이 관례처럼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지하는 부분도 이제는 검증을 하고 검사를 해서 제대로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중화 문제는 개발지역에는 다 지중화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원도심 부분에 어려움을 겪는 건데 그 부분도 한전의 자체계획이 있을 때도 있고 또 자금을 부담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한전과 좀더 긴밀한 협의를 하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것은 간판이 안 보인다는 이유로 나무를 훼손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게 또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가로수의 나무도 이제는 번호를 다 먹여서 이력관리를 하면서 또 담당자들도 인근에 지정을 한다든지 그 앞에 상점과 연결해서 수목관리에 대한 관심을 촉구한다든지 등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심어놓은 나무가 잘 클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충남대 앞에 메타세쿼이아 얘기를 하셨는데, 강변에도 심고 충대 앞에도 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1989년도에 심은 나무인데 아마 충남대학교를 졸업하셨거나 그 주변에 가신 분들은 또 하나의 추억거리였을 겁니다.

그래서 학교 주변에 특색있는 나무심는 것을 그 학교 동창회에다 제가 자꾸 권고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관련된 동문회 아니면 그 학교 교직원, 학생이 의미를 갖고 그 가로수로 중앙분리대를 한다든지 하면 남다른 겁니다.

예산으로 지원하면 혜택은 보겠지만 의미를 못 가져요, 그래서 그런 분야에 학교 별로 주변에 나무심기 운동도 제가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아이들한테 나무심는 게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돼서 가을과 내년 봄쯤에는 우리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1학년이면 1학년 학생들에게 묘목을 하나씩 다 줘서 아이들 때부터 나무에 대한 귀중함, 추억,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엄마와 같이 나무심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고자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미에 나무심는 문제와 관련해서 정말로 중요한 여러 가지 제안을 주셨습니다.

일일이 이것을 반복하는 것은 마땅치 않고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표하면서 이런 것들이 나무심기 운동에 반영되도록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랜드마크공원 조성 문제 말씀을 주셨는데, 월평동 일대가 보면 거의 다가 사유지입니다.

그것을 매입하는 문제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일전에 도마동 쪽 가다 보니까 또 사유림이 되다 보니까 지나치게 묘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상당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선뜻 이 부분을 매입을 해서 랜드마크공원으로 만들겠다고 자신있게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또 구별로는 동구는 식장산, 중구는 보문산, 서구는 월평산 아니면 구봉산, 대덕구는 계족산, 유성구는 수통골 이렇게 해서 다 중심 산이 있으니까 관내에 있는 산을 중심으로 랜드마크를 만들어달라 하는 주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랜드마크에 대한 서로의 어떤 의견조율이 아주 필요합니다, 어떤 시설을 어떤 장소에 하는 것, 그래서 좀더 논의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월평산에 사유지가 거의 다를 차지해서 매입하는 문제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랜드마크공원까지 가지 않더라도 지금 현재도 거기에 동서대로와 관련해서 일부 주민들은 환경을 보존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는 분이 계시고 또 도시교통여건으로 보거나 발전여건으로 볼 때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도로는 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같이 조율해 가면서 월평산 문제도 새로운 접근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지금 나무심기와 관련해서 질문의 순서에는 맞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이정희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는데 세부적인 사안이 더 있기는 합니다만, 아마 기본적인 취지가 제대로 된 방향을 잡아서 시민들의 참여 하에 제대로 된 식재하고 관리시스템을 갖추라는 총체적인 주문으로 이해를 하고 이렇게 답변드린 점에 대해서 양해를 구합니다.

이상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보충질문 하시면 다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議長 金榮寬 박성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신호 교육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大田廣域市教育監 金信鎬 존경하는 김영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늘 우리 대전교육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며칠 동안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미국 방문을 하고 와서 제가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의 세련되지 못한 행정행위로 인해서 교육사회위원회의 위원님들의 의사일정에 약간의 차질을 빚은 데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는 그 보고를 듣고 강하게 질책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일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 소속되어 계신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이 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형례 의원님의 애정 어린 시정질문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성실한 답변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서는 첫 번째 질문으로 “인성교육 소홀로 인해서 학교폭력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시면서 앞으로 학교현장에서 인성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폭력에 대한 사전 예방과 사후 관리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특별한 대책이 있느냐고 질문 주셨습니다.

교육은 가정이나 사회에서 형식을 갖추지 않고 이루어지는 비형식 교육과 학교에서 형식을 갖추어 이루어지는 형식교육으로 대별됩니다.

또 형식교육인 학교교육은 유, 초, 중, 고를 아우르는 기초기본교육인 보통교육과 대학 이상의 교육을 아우르는 직업과 학문을 위한 전문교육으로 나누어집니다.

지방교육자치단체인 시·도 교육청이 책임지는 유, 초, 중, 고 교육을 포함하는 보통교육은 지, 덕, 체를 균형있게 발달시키기 위한 전인교육을 지향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실력 있고 심성 바르며 건강한 학생을 길러내는 것이 보통교육의 목적이며 궁극적으로는 모든 영역이 골고루 발달하는 균형인 또는 전인을 길러내는 교육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통교육에서의 학교교육은 삼위일체 교육인 인성교육, 지식교육, 건강교육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으며, 고른 발달을 위하여 균형있는 교육을 전개해야 합니다.

학교교육의 교육과정이 그런 교육을 하도록 이미 짜여져 있으며 대전의 보통교육을 관장하는 우리 교육청도 이러한 교육철학에 충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사실은 형식을 갖춘 학교교육 못지 않게 가정이나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형식을 갖추지 않은 교육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육은 학교와 가정과 사회가 삼위일체가 되어서 협력할 때 그 교육효과가 배가된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학교폭력 문제가 위험수위에 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비단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적절한 시기에 존경하는 권형례 의원님께서 학교폭력문제와 인성교육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 번 짚어주셔서 우리 교육청으로 하여금 자기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정말 다행스럽고 감사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저는 학교폭력이 심화되고 있는 원인을 학교와 가정과 사회에서 찾아봅니다.

현대 우리 가정은 핵가족화, 맞벌이 부부의 증가, 부모의 이혼 또는 사망 등으로 인해서 가정의 교육기능이 매우 약화되었고, 과잉보호나 무관심 등 부모의 바람직하지 않은 양육태도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입시위주의 주입식 교육으로 정의적 교육이 소홀히 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에 따른 학업지도, 생활지도, 진로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오로지 학업성적에 의해 성공과 실패를 평가하는 학교풍토가 학업부진 학생에게 좌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는 어떠한가 하면, 물질만능주의와 퇴폐문화가 팽배해 있고 대중매체의 불건전한 오락프로그램이나 광고가 범람하고 있으며, 학교 주변의 각종 유해환경이 우리 학생들에게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예방과 치유는 교육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치유보다는 예방이 더 우선이고, 예방과 치유는 결국 일선학교, 학부모 그리고 사회기관이 서로 협력해서 노력할 때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 권고하신 대로 우리 교육청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먼저 일선학교의 인성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인성교육은 학교교육의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인 정규교육과정과 특별활동교육과정

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학습지도와 학생상담 등 생활지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도덕 교과뿐만 아니라 타교과에서도 인성교육 관련 단원에서 앞으로 강도 높은 지도를 저는 요구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학교별 예절교육 브랜드를 제정해서 그동안 강조되어 온 우리 전통예절과 기본생활습관 형성을 위한 생활지침을 설정하고 학교와 가정이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해 1 교 1 예절 교육코너를 운영하고, 우수 브랜드를 심사 표창할 뿐만 아니라 우수사례를 발굴 보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서 학생의 봉사활동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펼 것이고 학부모 지도봉사단을 각급 학교에 조직·운영하며, 교사들로 구성된 봉사활동연구회를 조직해서 지도자료 제작 및 일선학교 보급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예절교육과 봉사활동 활성화의 일환으로 언론기관과도 연계하여 봉사예절 대상도 추진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더불어 살아가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심성을 길러주기 위해서 앞으로 교육연수원의 야영교육, 해양수련원의 수련활동, 일선학교의 뒤편야영을 적극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생활지도에 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인성교육 우수교사의 사례를 발굴해서 표창하는 제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 예방교육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그동안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해서 지난 6월에 교원과 학부모 6,00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학기에도 교원과 학부모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폭력예방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2008년도에도 이를 더 확대 추진하고 학교폭력예방지원센터를 설치해서 학교폭력 예방 교육에 더욱 박차를 가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부적응 학생들의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한 대안교실로서 친한친구교실 6개 팀을 구성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배움터지킴이를 39개 교에 배치하여 교내·외 순찰과 개인상담활동 등을 통하여 학교폭력 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의 사후관리를 위해서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선도와 치료에도 힘써 왔습니다.

학교폭력 가·피해자의 선도와 보호를 위해서 3개의 특별교육 이수기관을 선정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대전보호관찰소와 협조해서 보호관찰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사와 학생 간 1 대 1 멘토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의 치료와 보호를 위해 현재 충남대학교 병원에 ONE-STOP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각급 학교의 위기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상담교사가 순회상담활동으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관리하는 등 사후대처에 힘쓰고 있습니다.

니다.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으로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대부분의 학교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꺼려해서 음성적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학교폭력 근절이 되지 않은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냐? 따라서 학교폭력이 발생할 때 앞으로 적절히 대처한 교사나 학교 측에 대해서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의향이 있느냐?”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충분히 의구심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의구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저한테 솔직히 보고해 줄 것을 강력히 주문했습니다.

그것은 솔직히 보고해 줄 때 그 치유를 완전하고 공정하고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교육적 차원에서도 필요합니다.

나중에 책임을 물을까 또는 두려워서 저한테 보고하는 것을 꺼려하고 자기들 스스로 처리를 해볼까 하다가 일을 더 크게 만들어서 뒤처리를 더 어렵게 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시기가 있을 때마다 확실하게, 신속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보고해 줄 것을 강력하게 지시한 바 있습니다.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예방은 물론이고 폭력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적절한 절차에 따라서 해결해 주어야 2차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그동안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서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지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즉각 교육청에 보고토록 해서 관계 기관들이 다 함께 신중하고도 철저한 사후대처를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존경하는 권형례 의원님께서 지금까지 해온 것에 대해서 완전히 만족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공고히 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학교폭력 발생 시에 학교에서 소리 없이 덮으려고만 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며,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학교폭력에 대해 적절히 대처해 나간 학교에 대해서는 대전교육발전실천연구대회나 생활지도실천사례연구대회 그리고 진로상담실천사례연구대회 등에 보고 또는 응모하도록 해서 우수사례를 발굴·소개하고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연구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으로 “학교폭력 문제해결 과정에서 외부의 전문기관이나 전문인력의 지원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개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저는 의원님의 생각과 같은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시에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초등단계에서는 학교와 교육청이 그 해결을 위해서 일차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그렇지만 때로 외부의 전문기관이 중재역할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문제 해결 지원프로그램으로 지난 6월부터 학교폭력 SOS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SOS 지원단은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 운영하는 학교폭력 위기상담·위기지원센터입니다.

위기상담지원센터에서는 학교폭력 전문 전화상담을 지원하며, 학교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심각한 학교폭력 사안에 개입해서 분쟁조정을 지원함으로써 학교폭력의 원만한 해결과 학생들의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SOS 지원단의 운영에 관해서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앞으로 실시해 나가겠으며 충남대학교병원에 설치되어 있는 ONE-STOP 지원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서 앞으로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학생과 학부모, 학교가 외부의 전문기관과 전문인력의 지원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서는 마지막 질문으로 “학교폭력의 감시를 위해서 교육청을 중심으로 한 관계기관의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유관기관인 교육청, 학교, 경찰, 학부모 등이 함께 하는 학교폭력 신고·상담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할 용의가 있느냐? 그리고 추진한다면 그 방안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교육청을 중심으로 한 학교폭력 신고·상담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아주 중요한 지적이라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미 교육청 홈페이지에는 학교폭력신고 사이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신고가 가능하고 대전광역시교육청 HOT LINE을 구축·운영하고 있어서 유관 단체의 전화번호를 탑재해 놓는 등 신고 네트워크를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청에는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배치해서 학교폭력신고 시 상담을 실시해 주고 있으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청소년쉼터 등 민간 단체들과도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상담과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청소년 지도에 활용하기 위하여 청소년 지도 유관단체와 교육청이 상호협조하여 인성교육지원단을 구성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당부하신 말씀을 유념해서 우리 교육청을 중심으로 여러 관련 단체들이 함께 참여하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학교폭력 신고·상담 네트워크를 보다 폭넓게 구축함으로써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학교폭력의 문제를 해결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의원님께서 질문 말씀하신 내용을 어제 밤에 봤고 저는 새벽 3시까지 공부를 하면서 답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준비한 내용 이외에도 저의 평소의 소신과 철학 그리고 생각과 앞으로의 행정방향을 많이 담았습니다.

이점을 어여쁘게 보시고 평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형례 의원님의 애정어린 질문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많이 부족해서 흡족한 답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내용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대전교육을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마음으로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 추진하고 2007년을 결산하는 올해 말에는 대전교육의 풍성한 결실의 기쁨을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과 함께 나눌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더운 날씨에 항상 건강하시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도 알찬 결실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대전교육에 대한 애정어린 지도와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議長 金榮寬 김신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

#### · 보충질문(김태훈, 권형례)

(15시 27분)

○議長 金榮寬 답변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답변 내용 중에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태훈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議員 김태훈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바 투기과열지구 해제,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등 우리 시의 현안사업이 절실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 수수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대전시도 이렇게 방관만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중앙정부에 대한 의사전달 및 시장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보는데, 정책적인 부분

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아닙니다.

시장의 행동의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구 공동화 부분에 있어서 시장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중구에 44개 정비구역이 지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동시에 지금 현재 서남부개발을 하면서 어떻게 중구에 재개발, 재건축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서남부권 개발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유성구 송강에 농업기술센터 이전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을 했던 바는 작년에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결과가 적법하고 합법적으로 나왔습니다.

시장께서는 시간을 갖고 천천히 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대전시 행정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이 되고 두 마리 토끼를 쫓다가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게 됩니다.

결국에 시민들이 시에 대한 행정과 여러 가지 정책적 사안들을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재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빨리 조속히 시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중구 공동화 문제 해결대안에 대해서는 시장께서 T/F팀까지 생각하고 계시다고는 했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공동화에 따른 정책·예산, 구체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한시적으로라도 관련부서까지 만들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시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 교육재정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장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모든 행정행위는 구체적으로 예산이 수반돼야 됩니다.

포괄적으로 교육예산에 대해서 비법정전입금이 얼마가 지원되고 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이 시간 이후 구체적인 정책과 예산확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영동 경륜장 부지 관련에 대해서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12월까지 최적의 안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현재 안영동 경륜장 후보지 일대는 자연녹지지역이지만 그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입니다.

또한 토지의 효율적 이용 차원에서도 이 지역에 정비와 개발이 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당위성으로 첫째, 현재의 안영동 경륜장 후보지 일대는 건축행위제한면적을 이미 초과한 상태이고 인접지역인 복수동, 사정동, 안영동

600번지 일원에 자연녹지구역에서 주거지로 변경되어 구획정리가 완료되었기에 이 지역은 녹지로써의 보존가치가 사실상 사라져버린 상태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전시 역시 경륜장 후보지로 안영동을 결정했습니다.

둘째, 안영동 톨게이트는 중구에 유일한 관문으로써 톨게이트 주변에 대한 도시정비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아직까지도 톨게이트 주변에 대한 도시정비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대전시에 다른 톨게이트 주변은 도시정비계획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로 형평성 차원에서 안영동 톨게이트 주변지역에 대한 정비개발이 적극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대전시가 2003년부터 안영동 일대를 경륜장후보지로 지정함에 따라 지난 3년간 안영동 지역주민의 개발행위 및 재산권을 제한해 왔으므로 그에 대한 보상차원에서라도 이 지역에 대한 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등으로 이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정비와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한편 최근 존폐 논란이 일고 있는 한밭문화제는 핵심테마의 부족으로 대전시민조차 외면한 축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전시는 변화를 모색해 오고 있으나 대안을 찾지 못한 채 올해 축제를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대전은 조선시대 정치이념이자 사상과 학문적 배경이 되었던 성리학, 기호 유학과와 본거지였습니다.

대전시가 이런 역사·문화적 배경을 소재로 하여 한밭문화제를 개선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로 발전시킨다면 한 단계 지역이 발전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 의원은 중구가 겪고 있는 공동화 현상을 해결하고 안영동 경륜장 후보지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한밭문화제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영동 일대 뿌리공원을 리모델링하여 대한민국 성씨축제로 변경 확대하고 한밭문화제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는 한편 대전의 유구한 성씨뿌리문화의 족보문화, 선비문화를 적극 관광자원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대전은 전국 최대의 족보전문출판사가 위치하고 있으며 세계유일의 뿌리공원을 보유하고 있는 등 자타가 공인하는 선비의 고장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서 제안한 관광벨트 지정과 관련해 보문산 일대의 뿌리공원을 대전의 오랜 역사 속에서 각 성씨별로 가꾸어진 고유한 문화와 그 지방에서 배출한 인물들을 선양하는 축제로 발전시킨다면 이는 전국적인 역사·교육 및 문화축제의 장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여유부지에는 족보박물관 건립과 문중마다 특색 있는 음식문화를 소개하는 음식문화관 그리고 먹거리장터 등을 설치하여 뿌리공원을 적극 관광자원화할 것

을 제안합니다.

둘째, 원도심 재개발로 인해 갈 곳을 잃어버린 삼성동, 정동, 중동 일대의 인쇄출판사들을 지금의 안영동 경륜장 부지로 이전하여 이 지역을 인쇄출판단지로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인쇄사업은 특성상 밀집된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원도심 일대의 인쇄출판사들이 아직 마땅한 부지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안영 톨게이트 주변의 경륜장 부지를 인쇄출판단지로 조성한다면 지역 경제 측면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주변의 뿌리공원과 연계해 전문화된 족보 및 성씨문화 인쇄출판단지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본 의원의 안영동 경륜장 후보지 주변 활성화 차원에서 제안한 내용들에 대해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이 지역에 대해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다시한 번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榮寬 김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형례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10분 이내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議員 교육사회위원회 권형례 의원입니다.

장시간 시정질문에 경청해 주시고 계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과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급속도로 화장문화는 전환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 있는데 시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민감한 부분이라 하여 방치하며 장기계획만을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셨습니다.

시민들의 불편한 목소리와 시대적 변화를 궁색하게 답변해 주셨다고 말씀드리면서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림동 화장장 현대화 사업에 있어 명확한 답을 요구했던 것은 2003년도 장사시설 중·장기수급계획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직도 방향과 정책결정을 명확하게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직무태만이라고 오전에 지적한 것입니다.

지난 1차 추경 시 기본설계용역비 1억 6,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던 것은 이미 기본설계 전에 사업정책과 방향이 나왔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질문드리자면 현대화 사업이라는 제목에서 느끼는 것처럼 본 의원은 세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화장장 시설 일부를 보수하고 증설하는 수준의 리모델링 차원이었는지 아니면 화장장 전체를 대상으로 한 초현대화 사업이었는지 아니면 또 다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시간을 끌었던 것인지 궁금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장께서는 이것 예민한 부분이고 흔히들 말하는 뜨거운 감자라고 해서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셨기에 이 자리를 빌어 명확한 답을 듣고자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사안의 중요성과 사업추진에 어려운 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동안 장사의 계획이 이렇게 필요한 것은 시장이 이에 관한 시급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현 사업에 관해 찬성적인 측면과 반대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찬성적인 측면을 이야기하자면 본 의원은 벌써 오래 전에 외국에 있는 장례문화의 발전적인 사례를 시찰한 바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갑천과 월평공원에 어우러져 있는 지역입지를 잘 살려서 세계 최고의 장사시설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도심권에 아름다운 화장장을 건립함으로 인해서 선진지 의식을 고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점은 반대 이유를 말하자면 오전에 본 의원이 질문드렸듯이 여러 가지 고려점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지금 시점에는 명확한 정책결정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도 시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검토만 하고 시간을 끌 사안이 이제는 아닙니다.

시장은 본 사안을 보다 관심을 갖고 빠른 시일 내에 명확한 사업추진 방향을 설정해 의회에 보고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남도 공동장사시설에 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주민소환제라는 논란이 있을 정도로 장묘시설에 관한 것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최근 논란되고 있는 하남시 사례의 경우를 봐도 장사시설 설치에 따라 경기도로부터 5,000억 원의 지원을 받아 시설비 3,000억 원, 지역발전기금 2,000억 원을 받아서 시의 발전기금으로 활용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런 사례와 충남도의 상호협력 방안에 관해 시정질문한 것은 현대화 사업은 156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중 국비는 53억 원에 불과한데 이런 막대한 시비 부담에 대해 고민을 같이 해보자는 뜻에서 대안을 냈던 것입니다.

본 의원이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상호 협정적 방법과 윈윈할 수 있는 정책으로, 어려운 시 재정을 전략적으로 많은 연구를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의 나름대로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만 이 모든 사안들이 신속히 처리되기 바라며 특히 장묘문화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명확한 정책과 결론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양육비 지원 대책에 관해서 본 의원이 경험했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

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겨울에 아이를 안고 찾아온 시민을 만났습니다.

6세와 4세 또 8개월쯤 된 어린아이를 안고 계신 어머니였습니다.

지금 보육과 교육에 관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이나 하면 실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보낼 때는 그 기관으로 지원금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허나 이 어머니의 이야기는 실제 유치원을 보내고 어린이집을 보내는 것보다 실제 어려운 가정에서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우유값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재정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중복되지 않는 지원책을 잘 검토하셔서 실제 시민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교육 분야 질문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신호 교육감님의 교육적 소신과 철학을 바탕으로 방향설정을 아주 명확히 해주셨기에 또 다른 보충질문은 없습니다만 각 현장에서 실천하는 의지들이 초지일관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지도력을 발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모든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榮寬 권형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경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金載京 議員 국책사업에 대한 질문 부분만 서면질문으로 하겠습니다.

○議長 金榮寬 서면질의로 대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李貞姬 議員 議席에서 - 없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시간인데 내용이 많아서 시장님께 한 20분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하고 16시 0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議長 金榮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박성호 시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大田廣域市長 朴城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없도록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아마 미흡한 점을 남겨서 수고스럽게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하게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태훈 의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는데 투기과열지구, 첨단의료산업복합단지 등 현안문제에 대해서 시장의 노력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주셔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글썄요 저는 나름대로는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투기과열지구 문제도 다른 도시에는 부산 일부도시가 1차적으로 해제가 됐는데 그전에도 저희가 수차례 건의했습니다.

또 건의하는 것 말고 지역 의원님들께도 자료를 드려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했고 저도 몇 차례 건설교통부도 방문을 했습니다.

아마 보도를 통해서 아시는 것처럼 어떤 수치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이해하기에는 수도권에서 어떤 개발구상을 하면서 그것이 혹시라도 영향을 받을까 봐 인근에 있는 천안·대전에 대해서 고려를 안한 것으로 정치적으로 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해결사항이 작용이 된다면 우리 지역에도 정치력을 키워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남아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분명히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도시는 올라가기는커녕 떨어지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의 과제인 투기규제 해제라는 개념뿐만 아니라 항상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관련된 건 또 수도권에 영향을 미칠까봐 조바심하는 내용 때문에 우리 지역이 고려 받지 못한 것 때문에 지역 홀대론까지 일어나고 있고 더군다나 그것이 지방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가감없이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아마 영향을 줬는지 지난번 동향을 파악해 보면 8월에는 좀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노라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과의 협의 문제가 그것을 어디까지 설명을 드려야 될지 조금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예산을 하든 국책사업을 하든 어떤 사안이든 간에 생기면 일단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루트가 있습니다.

우선 관계부서에 건의합니다.

그 다음에 지역 국회의원한테 자료를 드려서 상황을 설명해서 “도와주십시오.” 하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실무자들끼리 수없이 쫓아다닙니다.

그런 형태의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면서 최근에 정치권의 상황이라는 것이 아시는 것처럼 상당히 다른 문제들로 인해서 복잡합니다.

또 바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일에 많이 관심을 써주실 것으로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으면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저희가 업무적인 노력을 기울입니다.

또 중앙정부나 지역정치권의 협조 없이도 IAC 2009 사업은 지역단독의 노력으로 유지해왔습니다.

또 IASP도 마찬가지입니다.

컨벤션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자생적이고 자발적으로 추진할 사업도 적지 않습니다.

항상 예산이나 어떤 문제가 되면 결과론적으로 지적 받는 것은 집행기관의 노력의 부족으로 귀결되는 사안이 지금까지 관례입니다.

물론 이것을 완전히 거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반성을 하면서도 한편 집행기관도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이해해 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아울러서 의회와 관련돼서도 의장께도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역에 여론과 관련된 사안들도 우리 집행기관에서 자료를 다 드릴 테니까 해당 부처에 소관 상임위원으로 방문을 한 번씩 해주는 것만 해도 상당한 영향이 있습니다.” 하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집행기관과 의회가 같이 머리를 맞대서 공동노력을 하면 집행기관 혼자 하는 것보다 확실히 조금 더 효과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할 때도 이제는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의원님들과도 협력을 도모해서 분위기를 좀더 잘 만들어 가는 그런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됐습니까?

(○金泰勳 議員 議席에서 - 예.)

두 번째 공동화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이 보면서 202개소에 대한 지구를 저희 임기 개시 전에 지정이 됐습니다.

다들 그렇게 많이 지정되는 게 적절치 않지 않느냐는 후담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행위는 결정이 됐던 사안입니다.

그것도 역시 주민들의 합의나 동의가 전제돼서 추진돼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아마 당시로써는 지정이 안 되면 서운하고 지정되면 좋은 이런 분위기였던 것으로 생각이 돼서 아마 그렇게 많은 부분이 지정됐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업무추진에 합의와 많은 절차들이 필요해서 조금 시기적으로 분산되리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중구에서도 상당한 부분이 지구가 지정돼서 아마 가장 많은 지구가 중구에 설정돼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그 사업의 추진과 관련해서 민간과 민간 내의 갈등이라든지 다소 불

미스러운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저희 시에서 구청별로 그런 사업에 대한 설명회조차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아니면 다른 정보에 의해서 손해 보실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또 개발과 관련해서 서남부권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지역에 추계로 하면 1년에 한 1만 2,000호 정도가 집이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서남부 1단계는 그것을 연도별로 조정해서 5,000세대 정도가 공급되도록 속도를 조절하고 있고 2, 3단계는 2016년이 기간입니다만 추이를 봐서 이것도 조금 더 연기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동구, 중구 등에 대한 원도심 개발사업의 추이를 봐가면서 말씀하신 대로 서남부권은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농업기술센터 때문에 자꾸 걱정 듣는데 지금 의견들을 모아보니까 이런 저런 얘기가 있고 절차상의 이야기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느끼는 것은 아직도 서구와 유성일대의 농민들이 가장 많습니다, 농지도 가장 많습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다소 양금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업기술센터사업이 중단되는 것도 아니고 현재도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의견들을 거쳐서 원만하게 업무를 추진하리라는 그런 기대로 그런 노력으로 약간 시간을 두고 조정해 나갑니다.

일부 당초에는 일반주민들 생각은, 농민들 생각은 하나를 가지고 하나에다가 옮겨가는 유성 것을 가지고 딴 데 어디 한 지역에 다 집어넣는 이런 형태로 구상을 하셨는데 지역이 넓다보니까 복합적인 개념으로 볼 때 규모를 줄이더라도 또 유성의 진잠도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아주 열악합니다만 그런 것 몇 가지들을 좀더 복잡스러운 부분들을 좀 더 논의하고 구상해 볼 시간적인 필요가 있어서 아직은 확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단지 중단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 여유를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태훈 의원께서야 당연히 우리 관내인 중구 목달동에 이것이 와야된다고 강조하시는 점 충분히 이해합니다.

또 그런 내용을 전혀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고려사항이 되면서 아울러서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구상이 생겨서 어찌면 중구 목달동에 더 멋진 시설과 기능들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 것인지 하는 부분도 또한 포함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또 원만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시간을 갖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훈 의원님 강조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공동화와 관련해서 자꾸 걱정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중구 이제는 별로 큰 걱정 안 하셔도 잘 될 것 같아요.

이루어지는 건축사항이나 주변들의 발전추세로 볼 때 희망이 보인다하는 느낌이 사실 솔직한 심정입니다.

왜 동구와 중구가 어렵다하는 느낌을 갖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런 과정 속에서 한동안은 대덕구가 왜 대덕구만 소외했는가 하는 걱정을 하시는 내용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

물론 출신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당연히 의원님들의 본분이고 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정당합니다.

그렇지만 시 전체에서 보면 다소 우선 순위나 조율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재원의 문제 때문에 시기적인 차이가 있다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육재정과 관련해서도 교육에 대한 의지는 있는데 좀더 강조하시는 것으로 계획이 됩니다만 근본적인 차이는 지방자치의 근본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많은 나라들은 대개 지방자치를 하면서 교육과 경찰은 내포된 내용으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교육과 경찰이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지방자치를 한다고 그러면서 일반적인 많은 의무와 재정부담을 지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뭐가 좀 이렇게 잘 모양이 없는 그런 형태가 사실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중요성은 의원님들이 강조하는 것과 똑같이 공감합니다.

그래서 시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상당량의 부분을 교육과 관련된 내용으로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지역중심센터화 하는 사업 자체가 그런 목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교육의 질적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교육청에서 선생님들이 학습의 질을 높이는 일은 아마 전담하실 것으로 보지만 그 주변의 환경을 만드는 일은 우리가 좀더 거들 수 있는 일이라고 보는 것이고 또 일단 최근에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책 읽는 대전, 최고의 행복한 대전을 꾸며나가는 일도 일차적으로는 교육을 받고 있는 청소년 학생들에 대한 가치관이나 상상력을 키우는 일에 더 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쪽에서 직·간접적으로 교육에 대한 지원과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는 4개년 계획이라는 구상을 가지고 계획을 추진합니다만 여기에는 또 반드시 시비만이 투자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 국비에 대한 확보 노력도 가미해서 이런 부분들을 맞춰 나갈 것입니다.

또 교육이라는 부분이 또 그렇게 독립적인 부분이 아닌 것이 하다 못해 도서관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지방행정과 연관된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학교주변과 관련된 정비라든지 이런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아주 딱 잘라서 이것은 교육, 이것은 지방행정 이렇게 나누기가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의원들께서 아마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 업무보고를 받아보시면서도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단지 동서의 교육격차 문제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학교의 환경과 관련되거나 주변사안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합니다.

소위 어려운 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형태를 갖추고 있고 또 특목고라든지 자립형 사립고라든지 이런 교육의 직접적인 업무범위에 대해서도 간접적인 후원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교육감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과학영재학교 추진 문제도 저희가 간접적으로 후원하고 또 확정이 되면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재정적인 지원문제도 또 논의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의원님의 지적과 마찬가지로 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은 하지만 순차적이고 단계적으로 갈 수 있는 사정이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동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 어려운 부분이 지가입니다, 근본적으로.

우선 형상을 말씀드리면 안영동에 17만㎡ 정도의 규모입니다, 면적이.

그래서 현재 3.3㎡당 120만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성되어서 분양하는 토지로 될 경우에는 저희가 예상하면 한 300만원 이상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인쇄조합 종사자들은 3.3㎡당 100만원 정도의 수준의 용지가 아니면 우리 인쇄업자의 형편을 볼 때 어렵다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가가 어떤 부분을 다루는데 상당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제에 인쇄단지 문제는 그 지역 종사자들이 한 1,000여 명이 넘습니다만 웬만하면 그 지역에서 리모델링할 때 아파트형 공장으로 해서 거기에 집단화시키고 이런 것을 현재로써는 의도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동, 중동의 인쇄단지 인쇄골목 일대를 더 관심 갖고 의정활동하시는 의원님도 계십니다만 좀더 그분들의 진정한 동향을 파악은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3.3㎡당 토지가 문제가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민들은 아파트를 짓게 해달라는 것이 일반적인 요구입니다.

어디든지 자연녹지를 아파트로 짓게 해달라는 요구는 대전시에 전부 다 있습니다, “자연녹지 그대로 뒀습니다.” 하는 주민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토지에서 개발로 인한 이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는 절차가 있는 것이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설정되면 그 안에서 도시계획을 하게 됩니다.

지금 안영동지구는 도시기본계획이 자연녹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주거지역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 기본계획부터 정리가 돼야 되는데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이고 현재 저희 지역에 제공되는 택지나 주거용지로 볼 때에 상당히 수요적인 측면에서 매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이 현재의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일부 한 지역만 놓고 보면 여기도 집을 짓게 해주고 아파트를 지으면 좋을 텐데 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도시 전체의 녹지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주택에 대한 보급, 수급 문제라든지 이런 것 등등을 고려한다면 현재로써는 주민들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어려움이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과 관련해서 정비하는 문제가 있는데 물론 톨게이트마다 그 주변 정비계획을 세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데도 있고 그런 데도 있고 한데 그것과 상관없이 안영동 IC 일대는 누가 보더라도 무엇인가 괜찮은 지역이 진출입이 좋고 또 관광지 쪽으로 나가는 인구도 많고 그 인근에 아파트도 있고 또 안영동 물류단지도 있고 해서 주변에 무슨 구상을 하면 되겠구나 하는 구상을 갖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거기에 적절한 것을 찾지 못했을 뿐인데 중구의 의견도 있고 또 다른 구상도 저희가 계속 노력해서 연말까지 구상해볼 요량인데 가장 큰 문제가 토지가입니다.

민간이 와서 투자하는 부분이라면 경제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경제성이 없다면 민간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사업할 때 전 토지를 수용해서 사업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의 사업이 적절한가 하는 부분이 쉽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많은 고민이 필요한 그런 사업입니다.

한밭문화제와 관련해서 찾아보니까 지역의 많은 애기들이 있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오래 했지만 가면 갈수록 특성이 없어지고 참여하는 분들이 제한적이고 중복적이고 해서 지적이 많았습니다.

논란을 계속 하고 계시면서 지금도 이달까지인가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개선하는 축제를 찾아보는 중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에는 크고 작은 축제가 27개가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것이 3개이고 구에서 10개, 연구단지에서 9개, 민간과 관련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가 많기는 한데 특성 지어지는, 정말로 시민들이 참여를 통한 즐거움을 느끼는 축제를 구상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제안도 있고 지적도 있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밭문화제도 금년에는 못하더라도 새로운 방향을 찾아 하는 측면에서 전문가들과 시민들 의견을 모으고 있고, 뿌리공원 일대 성씨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뿌리공원은 중구에서 구성해서 2,000명 정도가 늘 다녀가는 우리 지역의 명소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전국에 그런 데가 없으니까요.

성씨 관련 조형물이 79개가 있고 앞으로도 49개를 추가로 해서 128개 성씨 조형물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죽보박물관 문제는 중구에서도 이런 데 착안해서 뿌리공원과 연계해서 죽보박물관까지 하면서 지역의 특성을 부각하고 관광명소화할 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구의 계획이 성립되면 시비나 국비에 대한 지원을 검토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씨축제들도 이런 것과 뭉뚱그려져서 중구에서 구상하면 지원해볼 구상입니다.

현재 죽보박물관, 성씨의 확장 추세까지 고려해가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관광벨트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적으로 공감하고 보문산 일대를 연결하는 연결프로그램, 도로라든지 연계하는 프로그램들을 잘 구상하면 그래도 지금보다 나은 쪽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봅니다.

최근에 플라워랜드 등 진행했습니다만 아이디어를 붙여서 보문산 일대에 위치하고 있는 특성적인 것들을 잘 연결하는 것, 반나절, 하루 이런 식으로 연결하거나 청소년들의 학습과 연결하는 과정 이런 것들로 궁리하면 아무래도 지금보다 훨씬 특성적이고 나아질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더 연구하겠습니다.

충남도와 관련해서 말씀주셨는데 저희들이 충남도 관련해서 정책프로젝트팀에서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훨씬 전에는 대전발전연구원에서 기본적인 구상을 했던 바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는 이 부분들이 충남도와 협력을 거치고 충남도가 우리와 협력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실무 협의체를 두어서 거기에서 진지하게 논의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간접적으로 아는 것 말고는 보도를 통해 충남도에서 얼마만큼 예산을 가지고 있고 예산을 구상하고 있고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는데 각종 용도라든지 이전한 뒤의 땅의 문제라든지 충남도청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실무협의기구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필요하다면 발전연구원도 있고 충남연구원도 있습니다.

같이 뭉쳐서 공동연구를 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보는, 저희도 이런 기회에 큰 손해보려고는 안 할 것이고 충남도도 이런 기회에 아마 부지에 대한 땅을 비싸게 받든지 어떻게 해서 재원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은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실무협의를 바로 부쳐서 합리적인 대안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로서는 우리 쪽의 구상을 갖고 가야 하기 때문에 먼저 구상하고 그리고 연결되는 선상에서 충남도와 협의하되 협의기구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권형례 의원님, 화장장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당초 기억하기에는 괴곡동 쪽으로 일원화하는 계획이 확정되었다가 민원이라는 문제와 관련돼서 계획이 수정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립동 지역에 현대화하자 하는 쪽으로 성립됐고 그와 관련해서 예산이 용역비가 세워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참 어려운 부분이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따라서 어떤 구상을 하더라도 사전설득과 구상들이 선행된 이후에 추진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 업무가.

현재로서는 단기적으로 현재에 있는 화장장 자체가 시설적인 규모나 수요로 볼 때 상당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개선을 하고 장기적인 구상에 관련된 사안은 그것대로 별도의 구상을 가지고 접촉하고 대화해 볼 그럴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의회와 더불어서 같이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아까도 예를 들었지만 그 사이에는 그런 구상이 없었는데 다른 지역에 얼핏 보도를 통해서 본 것에 의하면 어려운 부분에 어려운 시설을 보내면서 그것에 대한 운영권이나 다른 시혜, 좋은 여건들을 마련해주면서 그것을 합의를 이루어내는 그런 모습도 최근에 확인한 바 있어서, 그런데 지금 그것을 가지고 확정해서 이것을 하지 말고 그리 가자 확정해서 업무를 추진하기에는 실무적으로 시기 관계나 확정 관계나 여러 가지가 이런 것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장기적인 추세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 단기적인 대응도 해놔야 할 필요가 있어서 일응은 예산이 성립되는 대로 정립동 일대에 대한 개선을 추진해 나가면서 가능성 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충남도와 협의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당초 시에서 구상했던 대로 괴곡동 일대에 협의적인 사안을 잘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따지거나 실현가능성을 따져서 추후에 검토해 가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 믿고 있다가 아무 것도 안 되면 정말 민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안 되면 참 어려움을 겪게 되는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저희가 화장장 시설규모도 보면 시설의 낙후성뿐만 아니라 시설규모를 보면 2009년 정도로 가면 반반 정도로 했던 우리 지역의 화장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봐서 외지수요를 안 받는 것도 검토해서 시설의 사용기간을 충분히 넓혀놓고 시간을 갖고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사안이라고 보고, 아마 이런 문제들이 전국에 똑같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와 같은 시설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한

입법활동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별한 지원책을 강구해가면서 이런 사회적인 필수시설들이, 그러나 혐오시설이라고 인정되는 시설들이 분명히 화장장만은 아니거든요.

다른 것도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특별지원 관련된 입법활동들도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현재 수요나 노후도로 볼 때 현재 있는 부분을 우선 보완하고 적응해 가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활용가능한 대안들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실현가능성을 파악해 보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저희로서는 현실적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양육비 지원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다른 시·도도 보니까 우리처럼, 아까도 보고드렸습시다만 보육료 지원이 다른 시·도는 서울, 부산, 인천, 대구는 24개월을 줍니다.

서울은 보육료 전액, 부산은 10만원, 인천은 보육료 75%, 대구는 20만원, 광주는 출산장려금도 없고 보육지원료도 없습니다.

울산도 셋째 아이 이상 월 10만원씩 24개월을 줍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주 후하게 셋째 아이 출생 후에 35개월까지 20만원을 줍니다.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지원이 크지요.

그런데 출산장려금은 없지만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면 출산장려금을 주는 데보다 더 많이 주고 있는 것이 금액적인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검토를 종합적으로 해봐야 할 사안이고 우유값이 없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어디가 더 필요한지 하는 것들도 실제 보육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전문가뿐만 아니라 부모들 입장을 조사해서 정말 필요한 지원이 어떤 것인지 파악하고 그런 쪽에 비용의 다과를 떠나서라도 그런 것들을 찾아내도록 해서 출산장려라든지 보육 이런 부분에 관한 정책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린 것으로 생각되는데 혹시라도 미흡하거나 빠진 것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議長 金榮寬 김태훈 의원님, 권형례 의원님, 충분히 답변 되셨습니까?

박성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시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집행기관에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대전광역시의회는 150만 시민의 대표기관이며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막중한 사명감과 함께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정질문을 실시할 때마다 집행기관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에 대하여 적법타당하고 효율성 있게 추진되었는지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 후속조치가 미흡한 실정으로 철저한 사후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시정질문 시 지적되었거나 시정이 요구된 사항은 조

속한 시일 내에 개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시정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 네 분 의원님과 진지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박성호 시장님, 김신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2. 운영위원회위원(박수범) 보임의 건

(16시 39분)

○議長 金榮寬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운영위원회위원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6월 14일 장문철 의원이 사직함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 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박수범 의원님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새로 보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수범 의원이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보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칩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

## ○出席議員數 18인

김남욱	오영세	김영관	전병배
김태훈	김재경	곽영교	김학원
조신행	오정섭	송재용	이상태
박희진	박수범	심준홍	이정희
김인식	권형례		

##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대전광역시장	박성호
기획관리실장	유상수
경제과학국장	이진옥
투자통상본부장	김창환
자치행정국장	조찬호
문화체육국장	정하운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숙용
환경녹지국장	유상혁
교통국장	차준일

도시건설방재국장	박월훈
소방본부장	신현철
공보관	김낙현
감사관	정경자
기획관	권혁돈
공무원교육원장	박현오
상수도사업본부장	안규상
건설관리본부장	이상용
지하철건설본부장	김의수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홍목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선만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教育廳)

교육감	김신호
부교육감	이원근
교육국장	최영일
기획관리국장	이치범

○運營委員會 補任委員名

성명	정당
박수범	한나라당